전쟁기념사업회
KWO Korea War-memorial Organization

2024년 KWO 나지포럼 제1회 학술회의

(전쟁기념사업회 나라를 지키는 포럼)

2024년 2월 29일(목)
13:30~16:30
전쟁기념관 1층 이병형홀

글로벌 전쟁 상황 평가와 안보정세 전망

2024년 KWO 나지포럼 제1회 학술회의

글로벌 전쟁 상황 평가와 안보정세 전망

2024년 KWO 나지포럼 제1회 학술회의

글로벌 전쟁 상황 평가와 안보정세 전망

일시 : 2024년 2월 29일(목) 13:30~16:30

장소 : 전쟁기념관 1층 이병형홀

주최 : 전쟁기념사업회

발표주제와 순서

구분	시간	내 용
등록	13:30~14:00	등록 및 명찰 배부
개회식	14:00~14:15	국민의례 개회사(백승주 전쟁기념사업회장) 기념촬영
주제발표	14:15~15:15	【기 조 강 연】 글로벌 및 한반도 안보정세 평가와 전망 · 한민구(한국국가전략연구원장, 전 국방부 장관) 【1주제 발표】 글로벌 위기 상황은 언제 종식될 것인가? : 러시아 -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 - 하마스 전쟁을 중심으로 · 신각수(전 외교통상부 차관) 【2주제 발표】 총선 관련 북한의 도발 형태 분석 · 박휘락(국민대학교 특임교수) 【3주제 발표】 북한의 '헤어질 결심'과 '전쟁 결심': 의미 및 한계 · 박원곤(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통일학연구원장)
휴 식	15:15~15:30	
종합토론	15:30~16:00	· 좌장: 유용원(조선일보 군사전문기자 겸 논설위원) 【1주제 토론】 오성대(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소장) 【2주제 토론】 김귀근(연합뉴스 군사전문기자) 【3주제 토론】 금철영(KBS 기자)
리셉션	16:00~16:30	리셉션
폐회	16:30	폐회 선언

〈목 차〉

글로벌 및 한반도 안보정세 평가와 전망 ▌한민구 ·····7

글로벌 위기 상황은 언제 종식될 것인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을 중심으로 ▌신각수 ·····19

【토론: 오성대】 ·····35

총선 관련 북한의 도발 형태 분석 ▌박휘락 ·····39
1. 들어가며 ·····41
2. 북한의 위협 수준 ·····43
3. 총선 관련 ·····47
4. 총선 이후 북한의 전쟁도발 가능성 ·····52
5. 결론 ·····59

【토론: 김귀근】 ·····61

북한의 '헤어질 결심'과 '전쟁 결심': 의미 및 한계 ▌박원곤 ·····67
- 김정은이 선포한 '헤어질 결심'과 '전쟁 결심' ·····69
- 북한 노선 변화의 배경 및 의미 ·····69
- 2024년도 북한의 대남전략 전망 ·····76
- 2024년도 북한의 대미전략 전망 ·····76
- 북한 대남노선 전환의 한계 ·····77
- 한국의 대응 ·····81

【토론: 금철영】 ·····84

기조강연

글로벌 및 한반도 안보정세 평가와 전망

한 민 구

(한국국가전략연구원장, 전 국방부 장관)

안녕하십니까?
한국국가전략연구원장입니다.

새봄이 우리 앞으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국제정세는 마치 한겨울에 북풍이 몰아치는 벌판에 서 있는 것처럼 차가운 냉기를 느끼게 합니다. 인류의 역사는 시련에 '순응'하기보다 '도전'하는 사람들이 주도해 왔습니다. 오늘 개최되는 전쟁기념사업회의 『KWO 나지포럼 제1회 학술회의』가 '도전'을 위한 '지혜'를 찾고 '의지'를 가다듬는 계기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기조연설의 기회를 주신 백승주 전쟁기념사업회 회장님께 감사드리며, 함께 해주신 모든 참석자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각별한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글로벌 및 한반도 안보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미중 전략경쟁의 지역과 범위가 날로 확대·심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형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대만해협 위기, 그리고 북한의 '남한 전 영토 평정' 등은 우리들에게 '전쟁'과 '평화'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여기에 더해 소위 '트럼프 리스크'로 상징되는 미국 대선의 불확실성은 우리들에게 미래 국제정세를 보다 진지하게 성찰하고, 철저히 대비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먼저 글로벌 차원의 안보 정세를 전망해 보고, 북한의 위협을 중심으로 한반도 정세를 평가한 후, 우리의 대비 방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미중 전략경쟁이 심화·확대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개최된 미·중 정상회담에서, 2022년 8월 펠로시 당시 미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을 계기로 단절되었던, 군사 소통채널의 복원과 기후위기 공동 대응 등에 합의함으로써 군사적인 충돌 가능성은 한층 낮아졌습니다만, 미중 전략경쟁은 외교·안보 차원을 넘어 경제·기술·가치 등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미중 전략경쟁은 지역적으로도 확대일로에 있습니다. 인·태 지역에서 시작된 경쟁이 유럽 지역으로 옮겨가면서 미국 중심의 NATO와 중·러 전략적 연대 간의 치열한 경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2년 6월 공개된 NATO의 전략개념에는 중국을 '체계적 도전(Systemic Challenge)' 국가로 규정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동맹 결속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은 러시아와 전략적 연대를 강화하는 동시에 미국 주도의 일극 질서를 비판하며 세계 질서의 다극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중국·러시아·인도·브라질·남아공 등 5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브릭스(BRICS)는 작년 8월 정상회의를 통해 '브릭스 플러스(BRICS Plus)'를 출범시켰습니다. '브릭스 플러스'는 기존 브릭스 회원국에 사우디·UAE·이란·이집트·에티오피아·아르헨티나 등 6개의 신규 회원국을 더한 회의체로서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사우스'는 중부아메리카·남아메리카·아프리카·중동·아시아의 120여 개국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 중 대부분은 미국·서방 연합과 중국·러시아 연대의 대립적 구도 속에서 국익 중심의 유연한 접근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브릭스 플러스'의 출범으로 '글로벌 사우스'의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국제질서의 다극화 추세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동북아 지역에서 미중 전략경쟁은 한·미·일 대 북·중·러의 연대 가속화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한·미·일 연대 가속화가 북·중·러 연대의 빌미를 제공했다며 한·미·일 연대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중국의 기존 질서에 대한 도전, 북한의 핵무장,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한·미·일 연대를 촉발하는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했다고 보는 것이 올바른 해석일 것입니다.

북·중·러가 제기한 도전에 맞서기 위해 한·미·일은 2023년 8월 캠프 데이비드에서 3국 협력 시대를 선언했습니다. 한·미·일은 캠프 데이비드 '원칙', '정신', 그리고 '3자 협의 공약'을 통해 군사뿐만 아니라 경제·기술·공급망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인 연대와 협력에 합의했습니다. 특히 역내 '도전·도발·위협'에 대해 3국의 즉각적인 협의와 공조를 약속한 '3자 협의 공약'의 채택으로 3국 간 안보협력은 크게 강화될 전망입니다.

2023년 한·미·일은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의 실시간 공유체계 구축, 해상 미사일 방어훈련 및 대잠훈련, 연합공군훈련 등 다양한 안보협력을 추진했습니다. 2024년에는 한·미·일 연합훈련을 제도화하면서 시너지 효과 창출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미·일 안보협력으로 한국은 무엇보다 북핵에 대한 강력한 억제력을 갖게 되었고, 경제·기술 분야 혜택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사드 때 보여준 중국의 고압적인 태도나 러·북 밀착을 3국이 함께 견제할 수 있게 되어 매우 희망적입니다.

그러나 북·중·러의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캠프 데이비드 협력에 대해 즉각적인 맞대응에 나선 것은 러시아였습니다. 푸틴은 9월 13일 김정은을 보스토치니 우주기지로 초청하여 무기 거래의 대가로 발사체와 위성 관련 협력을 시사했습니다. 모두 안보리 결의 위반이지만, 개의치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러시아의 기술지원에 힘입은 북한은 작년 5월과 8월의 실패를 딛고 11월 21일 정찰위성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북·러의 밀착은 날로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한은 포탄과 군수물자에 이어 탄도미사일까지 러시아에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러시아도 군사기술 지원에 추가해 러시아 내 동결되었던 북한자금의 일부 해제, 러시아 관광객의 북한 방문 추진, 북한 인력 수입 등으로 교류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러시아에 제공할 수 있는 군사지원의 질적· 양적 수준을 고려했을 때 러시아가 ICBM, 핵추진 잠수함, 첨단 미사일 등 전략자산 관련 기술을 지원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와 북한이 처한 국제적 고립과 절박한 상호지원 필요성으로 전략기술 지원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중국의 반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 주도의 한·미·일 안보협력이 자신을 겨냥하고 있다고 믿는 중국은 약한 고리로 인식되는 한국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APEC 계기 한·중 정상회담에 응하지 않았고, 한국이 주최할 예정인 한·중·일 정상회담도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군사적으로는 북한의 위성·미사일 발사를 옹호하면서 군사훈련을 빌미로 우리의

방공식별구역을 무단 진입하는 등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형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은 글로벌 안보상황에 불안정성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2022년 2월 시작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2023년에 접어들면서 교착국면의 소모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진행되는 가운데 2023년 10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2개의 전쟁이 동시에 진행되는 '다중분쟁' 국면이 형성되면서 미국의 국방전략에 중대한 도전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1개 전쟁에서 승리를 추구하는 동안 다른 지역에서는 전쟁이 발발하지 않도록 억제하는 'Win and Hold' 개념을 국방전략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개념은 미국의 유일한 전략적 경쟁국인 중국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동안 다른 지역에서의 공세행위를 억제하는 것을 기본 전제로 구상된 전략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글로벌 안보상황은 유럽과 중동에서 2개의 전쟁이 진행되고 있고, 대만해협과 한반도에서도 위기가 점차 고조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위기가 다중복합분쟁으로 발전한다면 미국은 군사력 운용에서 심대한 도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상황을 더욱 불확실하게 만드는 것은 미국의 대선입니다. 트럼프의 재집권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트럼프 리스크'가 현실화될 것에 대한 동맹국들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는 미국에 이익이 된다면 동맹국들의 안보는 그다지 중요치 않다는 인식을 반영하고 있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습니다.

지난 2월 10일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열린 선거 유세에서 트럼프의 본심이 드러났습니다. 트럼프는 방위비 분담에 소극적인 동맹국들에 대해 "나는 당신들을 보호하지 않을 것이다. 러시아가 원하는 대로 하도록 격려할 것이다."라며 러시아를 부추기는 발언을 했습니다. 미국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동맹국들의 안보도 희생양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 발언으로, 이에 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관심은 북핵문제와 관련하여 회자되고 있는 '핵사용 위험감소(Nuclear Risk Reduction)' 논리입니다.

이 논리는 북한의 비핵화가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에서 위협이 커지는 것부터 우선 막아야 한다는 현실론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논리의 핵심은 '동결 대 보상'으로, 지금까지 한·미가 추구해 온 비핵화 목표인 CVID와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해법이 현실화되면, 북핵 용인 논란과 함께 북핵문제 논의를 워싱턴 선언 이전으로 회귀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북핵문제 외에도 트럼프가 재집권할 경우 방위비 분담문제, 주한미군 철수 또는 감축 문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문제, 인·태 지역에서 한국의 역할 확대 문제 등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시야를 한반도로 돌려보면, 지금의 한반도는 언제 국지도발 또는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만큼 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는 바로 북한의 핵무장 강화, 남조선 전 영토 평정, 한·미 선거를 정략적으로 활용하려는 불순한 의도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북한은 2021년 1월 제8차 당대회에서 채택한 핵개발과업을 이행하는 데 진력해 왔습니다. 2023년 북한은 '전술핵무기 다량 생산'과 '핵탄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릴 것'을 명령한 김정은의 지시를 이행하면서 고체 추진 ICBM, 전술핵공격잠수함, 군사정찰위성 등의 개발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2022년 9월 채택한 핵무력정책법을 헌법에 반영하고, 핵반격가상종합훈련과 핵무인수중잠수정 기폭시험을 실시하였으며, '화산-31' 전술핵탄두와 투발 수단들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2024년에도 북한의 핵무장 강화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1월 14일 고체연료 극초음속 중거리탄도미사일 발사, 1월 19일 수중핵무기체계 '해일' 시험, 1월 24일부터 총 5차례의 순항미사일 시험 등이 진행되었습니다. 북한은 앞으로도 그들의 필요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시험 발사를 계속하며 긴장을 고조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남조선 전 영토 평정'에 대한 김정은의 수사도 시간이 갈수록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해 말 개최된 노동당 9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은은 남북 관계를 “전쟁 중인 두 교전국 관계”로 규정하고, “유사시 핵무력을 포함한 모든 물리적 수단과 역량을 동원해 남조선 전 영토를 평정하기 위한 대사변 준비에 계속 박차를 가해 나가겠다.”라며 적화통일 야욕을 공식화했습니다.

금년 1월 15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김정은은 “공화국 민족역사에서 ‘통일’, ‘화해’, ‘동족’이라는 개념 자체를 완전히 제거해 버려야 한다.”라며 평양시 통일거리 입구에 설치된 조국통일 3대 헌장탑(자주·평화통일·민족대단결) 철거를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2월 8일 인민군 건군절 기념사에서는 한국을 “가장 위해로운 제1의 적대국가, 불변의 주적”으로 지칭하고, “유사시 영토를 점령·평정하는 것을 국시로 결정한 것은 우리 국가의 영원한 안전과 평화와 안정을 위한 조치”라고 강변했습니다.

김정은의 언사에 대해 우리 사회는 서로 다른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북한이 ‘헤어질 결심’을 했다고 평가하면서 체제경쟁에서 실패한 북한이 내부 단속을 위해 ‘절연’을 선포한 것으로 분석합니다. 반면, 또 다른 한편에서는 북한이 핵능력을 바탕으로 ‘전쟁할 결심’을 했다면서 ‘강 대 강’의 맞대응보다 긴장 완화를 위한 유화정책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한·미 선거를 정략적으로 활용하려는 북한의 불순한 의도를 경계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한국의 총선을 겨냥해 사이버 여론 조작, 회색지대 도발 등을 획책함으로써 우리 정부의 신뢰성을 훼손시키는 데 중점을 둘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 대선을 겨냥해서는 7차 핵실험 등 공격적인 핵능력 증강으로 향후 미국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입지 구축을 기도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및 한반도 안보정세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24년은 우리에게 수많은 ‘도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가 ‘도전과 응전’의 역사임을 고려할 때 지금은 다가올 ‘도전’에 대해 또 한 번의 ‘응전’을 준비해야 할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필요한 조치는 국지도발 대비태세의 완비로 북한의 도발이 우리 사회

에 미칠 영향력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이는 확고한 즉응대비태세를 유지하되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불필요한 언행은 엄격히 통제하는 '절제된 행동'을 통해 전략적 안정성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도발한다면, '압도적 응징'으로 북한의 미래 도발의지를 확실하게 말살해야 합니다.

둘째, 미국 대선 전까지 핵협의그룹(NCG)의 제도화와 재래식핵통합(CNI) 운용을 완성해야 합니다. 핵협의그룹 제도화에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2024년 미국 대선 결과의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조기에 제도화를 완성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재래식 전력과 핵전력을 통합 운용하기 위한 작전계획을 구체화하고 연합훈련을 통해 절차를 숙달해야합니다.

또한 트럼프의 재집권에 대비하여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는 대비도 필요합니다. 미국의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Nuclear Free World'를 주장하며 비확산 정책에서 매우 완고한 입장을 취해 왔습니다. 반면, 공화당은 보다 현실주의적 입장으로, 트럼프는 2016년 대선후보 당시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을 용인하는 듯한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 성향, 거래적 리더십 스타일 등을 고려했을 때 상호이익을 맞교환하는 '통 큰 협상' 준비도 필요할 것입니다.

셋째, 한·미·일 협력 강화와 북·중·러 밀착 차단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최근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의 실시간 공유, 해상 미사일 방어훈련, 연합공군훈련 등 한·미·일 안보협력이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한반도 유사시 유엔사 후방기지의 활용과 일본의 미사일 방어능력, 적기지 공격능력 등을 한·미의 능력에 어떻게 통합할 것인지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북·중·러 연대 차단을 위한 노력도 배가해야 합니다. 특히 향후 북·러간 밀착 정도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전개 방향, 북한이 러시아에 제공할 수 있는 군사적 지원의 종류와 수준, 국제사회의 대응 노력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과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다층적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아울러 북·러간 군사 거래를 적극적으로 식별하고, '비난 및 창피주기(Naming and Shaming)' 전술을 활용하여 식별된 거래를 사전 또는 사후의 적절한 시점에 공개함으로써 러시아가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책임을 느끼고 본분을 다하도록 강요해야 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노력을 통해 러시아 군사기술의 북한으로 이전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또한 북·러 밀착에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는 중국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중국은 북한과 러시아의 전략적 선택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가입니다. 그리고 한반도 안정유지를 기본기조로 하는 국가입니다. 중국의 이러한 입장과 미국의 중국에 대한 경제적 레버리지를 활용하여 북한의 도발과 현상변경 시도를 통제하고, 러시아가 북한에 고급 핵·미사일기술을 제공하지 않도록 강압해야 합니다.

넷째, 중장기적인 조치로, 북한의 비핵화와 체제변화를 연계한 통일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최근 북한은 그동안 주장해 온 '연방제 통일'의 가면을 벗고, 핵무력을 이용한 남조선 전 영토 평정을 노골적으로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 비핵화는 체제변화를 통해서만 달성할 수 있고, 북한의 핵을 이용한 무력 적화통일 야욕은 한국 주도의 통일이 이루어졌을 때 폐기될 수 있습니다. 베트남·예멘·독일 등 이념으로 분단되었던 국가들의 체제경쟁은 어느 일방으로 통합되었을 때 종료되었습니다. 따라서 북한 체제 변화를 중장기 목표로 선정하고 제 국력을 종합적으로 활용하는 통일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국방혁신 4.0을 통해 싸워 이기는 '자강형 군대'를 건설해야 합니다. 안보전략의 핵심은 '자강'과 '동맹'입니다. '자강'은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스스로 지키는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동맹'은 '자강'을 보완하기 위해 이익을 공유하는 국가들이 외부 위협에 공동으로 대처하는 것입니다. 특히 미래에 직면할 전략상황이 불확실할수록 '자강'의 중요성은 커집니다.

지난 70년 동안 한국안보에서 '동맹'은 '자강'보다 우월한 지위를 점해왔습니다. '국방혁신

4.0'에서는 '자강'을 기본으로 하고, '동맹'이 이를 보완하는 군대를 지향해야 합니다. '자강형 군대'는 정치 지도자의 강한 의지, 국민의 단합된 힘, 강한 군대가 삼위일체가 되었을 때 구현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실정에 맞는 '한국형 국방혁신'을 모색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걸프 전쟁과 이라크 전쟁을 보면서 미래의 전쟁을 상상해 왔습니다. 압도적인 정밀타격, 단기간의 지상작전, 극소수의 사상자 발생, 민간인 피해도 거의 없는 전쟁입니다.

얼마나 많은 국가들이 미국식 전쟁을 수행할 수 있을까요? 미국의 국방예산은 2024년도 기준 8,860억 달러, 한화로 1,100조 원에 달합니다. 이 중에서 국방연구개발 예산만 한국 전체 국방예산의 2배 이상입니다. 이러한 격차를 무시하고, 유사한 작전수행개념과 군구조로 미래의 전쟁을 준비하는 것은 비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전쟁에는 '도약적 변화'와 '진화적 변화'가 공존한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합니다. 우주기반 네트워크, 극초음속 미사일, 첨단드론 등은 이미 새로운 전쟁 시대가 도래한 것과 같은 느낌을 갖게 합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병사들은 1차 세계대전처럼 교통호에서 소총과 수류탄으로 싸우고 있고, 재래식 포탄이 전쟁의 주도권을 좌우하는 모습도 목격됩니다. 따라서 'High-Low Mix' 개념의 국방혁신을 모색해야 합니다.

'게임체인저(Game Changer)'에 대한 환상도 재고해야 합니다. 재블린 대전차미사일, 하이마스 다연장로켓, 첨단드론 등이 신문의 1면을 장식합니다. 하지만 수주 혹은 수개월 사이에 대응체계가 등장하고 효과가 반감되는 현상을 목격하게 됩니다. 전쟁은 자유의지를 가진 적과의 극단적인 대결입니다. 결국, 전투력은 다양한 유·무형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통합되어 어떻게 승수효과를 창출할 수 있느냐에 따라 좌우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저는 2024년이 우리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글로벌 및 한반도 안보정세는 냉엄하지만, 우리 국민 모두가 단결하여 슬기롭게 응전해 나간다면, '도전'을 '희망'으로 바꾸는 한 해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의 논의가 그 밑거름이 될 것으로 확신

하며 활발한 논의를 기대합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글로벌 위기 상황은 언제 종식될 것인가?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을 중심으로

신 각 수
(전 외교통상부 차관)

지구촌이 다중전쟁(poly war)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2023년 10월 가자지구의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테러 공격함으로써, 세계 3대 전략 지역인 동아시아, 유럽, 중동 가운데 2개 지역에서 전쟁이 진행 중이다. 우리나라가 위치한 동아시아에서도 핵무장 완성 단계에 접어든 북한의 핵 위협과 지속적인 도발은 최근 남한을 별개의 적대 국가로 간주하는 대남정책의 급변과 함께 한반도에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중국의 대만을 둘러싼 중국의 군사적 압력으로 침공 우려도 커지고, 남중국해의 통항 자유와 도서 영유권을 둘러싼 동남아국가들과 미국 대 중국의 각축도 동아시아 단층대에 압력을 높이고 있다.

이러한 지구 곳곳의 열전과 긴장 고조로 인한 글로벌 위기 상황은 왜 초래되었고 언제 종식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2020년대가 어떤 시대적 전환점에 있는지를 우선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제질서는 2020년대 초부터 혼돈의 복합대전환 시대에 접어들었다는 점에서 글로벌 위기 상황은 구조적 측면이 있음을 알 수 있다. 1990년대 초 소련이 멸망과 함께 냉전이 종식되면서 시작한 탈냉전 시대에는 미국이 유일 초강대국으로서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이끌었다. 냉전 시대 동서 대립을 통해 미국에 도전하던 소련은 체제의 내부 피로 누적으로 스스로 붕괴하였고, 이에 따라 더는 미국의 패권에 도전할 국가가 사라졌다. 프랜시스 후쿠야마가 '역사의 종언'을 통해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압도할 것임을 주장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1990년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하였을 때 미국이 주도하는 다국적 연합군이 안보리 5대 상임이사국의 지지를 포함한 안보리의 승인을 받아 개입한 사실이 당시 미국의 국력과 영향력을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이는 1950년 소련의 불참으로 유엔헌장 제7장 상의 강제조치가 발동되었던 한국전쟁 이래 처음으로 안보리 승인을 받은 무력행사였다. 그리고 미국이 사용한 정밀무기(precision weapon)는 미군의 희생을 최소화하면서 이라크군을 궤멸시킴으로써, 미국의 2차 상쇄전략(Offset Strategy)의 진수를 그대로 보여주었다. 미국은 압도적 경제력과 군사력을 바탕으로 탈냉전 시대의 국제질서를 유지하는 데 별 어려움이 없었다.

이러한 미국 주도 국제질서 변화의 단초를 제공한 2개의 사건이 21세기가 시작된 2001년 발생하였다. 하나는 미국이 독립 이래 처음으로 미국 정치·안보·경제의 중심지에 대한 테러로 약 3천 명이 목숨을 잃고 약 10억 불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한 9.11 테러 사건이다. 사우

디아라비아에서 만들어져 아프가니스탄에 본거지를 둔 알카에다 테러그룹이 보스턴에서 네 대의 비행기를 납치하여 두 대는 금융 중심지인 월가의 쌍둥이 빌딩, 한 대는 국방성에 충돌시키고, 나머지 한 대는 워싱턴의 백악관 또는 의사당에 충돌시키려 하였으나 승객들이 제압하여 무산되었다. 비국가 실체인 국제 테러그룹이 최강대국의 심장부를 공격한 이 사건은 미국 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으며, 그 후 20여 년간 대테러 전쟁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중동에 미국의 발목을 묶어 놓았다.

미국은 2001년 10월 자위권을 발동하여 유사의지연합(Coalition of the Willing) 국가들과 함께 알카에다 조직에 근거지를 제공한 아프가니스탄을 공격하여, 한 달 만에 탈레반 정부를 축출하고 주요 도시를 점령하였다. 이어서 2003년 3월 미국은 영국, 호주 등과 함께 대량파괴무기 개발과 테러 지원을 이유로 이라크를 침공하여, 한 달 만에 점령하였다. 아프가니스탄과 달리 이라크의 경우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서구 국가와 러시아의 반대로 명확한 안보리 승인을 받지 못 해 그 합법성이 논란거리가 되었다. 군사적으로는 압도적 군사력에 힘입어 단기간 내에 양국을 점령하였지만, 아프가니스탄에서는 탈레반, 이라크에서는 해산된 공화국군대, 바트당과 테러그룹, 수니파 등이 결합한 형태로 게릴라전과 테러 행위를 전개하면서 내전 상태에 들어갔다.

아프가니스탄에서는 2021년 8월 미군이 철군하고 정부군이 궤멸하면서 20년에 걸친 전쟁이 끝나고 탈레반이 재집권하게 되었다. 이라크에서는 2008년 중반 반군은 진압하였지만, 2011년 12월 미군이 철군한 뒤 다시 지하드 단체이자 준국가로까지 커졌던 이슬람국가(IS)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이라크 영토를 점령하는 등 내전이 이어졌다. 이와 같이 미국은 20여 년에 걸친 대테러 전쟁에서 하루 3억 불에 달하는 막대한 전비를 썼지만, 아프가니스탄은 탈레반에 다시 빼앗기고 이라크는 친이란 시아파정부의 지배로 만드는 중대한 실패를 경험하였다.

또 다른 하나의 사건은 중국의 WTO 가입이다.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 노선에 나선 뒤 연 10%를 넘는 고도성장을 계속하였지만 2000년 세계 6위의 경제력에 불과하였다. 미국은 중국경제가 성장하면 과거 경제성장 후 민주주의로 이행한 한국과 대만처럼 민주화의 길로 나서고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이해당사자'로 행동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중국의 WTO 가입을 지지하였다. 중국은 이를 통해 무역과 투자에서 열린 시장의 혜택을 누리며 2010년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에 올랐다. 그러나 2012년 5세대 시진핑 주석이 집권하면서 미국의 기대와는 반대로 '중국몽'을 내세워 미국 주도 자유주의 국제질서에 도전하는 수정주의 세력

으로 변모하였다. 반면에 금융자본주의 국가인 미국은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로 인한 주택 버블이 터지면서 금융위기에 내몰렸으며 세계 금융위기로 발전하였다. 그리하여 중국경제는 GDP 기준으로 2000년 미국의 11.8%에 불과하였으나 2020년 70.6%까지 신장하였고, 2030년경에는 미국경제를 추월할 것이라는 예측까지 대두하였다. 이러한 미국경제의 상대적 하락은 중국 지도부에게 미국의 쇠락으로 인식되었고, 중국의 빠른 부상과 맞물려 미중전략경쟁을 촉발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미국의 오산에는 유일 초강대국으로서의 오만, 신자유주의에 대한 과신, 미국 외교에서의 군사 과잉주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다고 할 수 있다. 예컨대 이라크 침공에서도 점령 후 안정화를 위한 충분한 지상 병력을 파견하자는 군부의 건의를 묵살하고 또한 공화국 군대와 바트당을 완전 해체·배제함으로써 기존 통치기구의 협조를 전혀 얻지 못하였다. 아프가니스탄은 알카에다의 은신처로 탈레반 정부가 비호 세력이었다는 점에서 자위권 행사에 따른 군사력 사용이 불가피하였다. 그러나 이라크의 경우 전쟁 명분이 약하고 외교 노력을 모두 소진하였다고 볼 수 없었다는 점에서 동맹국과의 불화와 정통성 부족을 초래한 실수였다. 결과적으로 중동에서 가장 반미 세력인 이란의 전략적 입지를 강화해 줌으로써, 게도 잃고 구럭도 잃는 전략 실패로 이어졌다. 지난 20여 년간 미국이 이런 전략적 실수로 상대적 국력이 저하하는 사이에 중국의 국력이 빠른 속도로 부상하면서, 미중의 경제력·군사력 관계가 변하였고, 이는 미국이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유지하는데 큰 도전 요인으로 대두하였다.

이와 함께 국제질서의 다양한 구조적 변화들이 기존 질서를 흔들고 있다. 우선 세계 경제가 저성장 시대에 접어들었고 선진국 경제가 정체하는 가운데 신흥국과 개도국 경제가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세계화를 통해 물자·상품·자본·기술·인력의 이동이 자유로워지면서 선진국 제조업이 신흥국과 개도국으로 활발히 이동하였다. 이에 따라 선진국의 제조업이 공동화하고 중산층이 빈약해지는 가운데, 신흥국·개도국 경제가 부상하였다. 선진국그룹인 G7의 세계 GDP 비중이 2000년 64.4%에서 2020년 45.4%로 떨어진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특히 선진국에서는 저성장과 실업으로 사회불안이 증대하고 부의 편재로 인한 불평등이 심화되어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중산층이 감소하면서, 대중인기주의, 극단주의, 국수주의, 대외 배타주의 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런 현상들은 국내 정치적으로 민주주의의 기반을 흔들고 대외정책에서도 국제협력주의보다는 자국 국익우선주의와 일방주의로 규범 기반의 국제질서, 다자주의와 국제기구의 역할이 크게 후퇴하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가장 극단적인 예가

미국 정치에서 이단이라 할 수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높은 인기라 할 것이다. 트럼프주의는 공화당에서 전통적 보수층을 밀어내고 공화당을 지배하고 있으며, 11월 미국 대선에서 현직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한편 신흥국·개도국의 경제력 신장은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의 대두로 나타나고 있다. 서구와 중국·러시아·이란 등 권위주의 국가 간의 대립에서 글로벌 사우스는 독자적 위치를 확보하고 있다. 이들은 종래의 비동맹이 아니라 '다양한 연계(poly-alignment)'를 통해 전략적 가치를 높이고 올라간 위상에 상응하는 역할을 모색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침공에 관한 유엔 총회의 표결에서 글로벌 사우스가 보인 표결 행태는 글로벌 웨스트나 이스트에 묶이지 않고 독자적이었다. 5개의 결의에 관해 인도와 남아공은 모두 기권하였고, 브라질과 사우디아라비아는 3개 찬성, 2개 기권, 멕시코는 4개 찬성, 1개 기권으로 독자적 목소리를 냈다. 미국과 쿼드의 일원인 인도는 서방의 제재를 무시하고 러시아 원유를 대량 도입하고 있다. 브라질, 튀르키예, 사우디아라비아,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 남아공 등은 개도국들과 함께 자국의 국익과 전략적 독자성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제3의 축을 구축하면서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높이고 있다. 이렇듯이 국제사회가 분열된 만큼, 세계통치(global governance)는 더욱 어렵고 힘들게 되었다.

결국 조지타운 대학 찰스 A. 쿱찬(Charles A. Kupchan) 교수가 지적하였듯이,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승리 이후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유지와 확산을 외교정책으로 내세워 냉전을 이겼으나, 이 질서를 토대로 중국, 인도, 브라질, 남아공 등이 국력을 신장하여 자유주의 국제질서에 도전하는 역설적 상황을 마주하게 된 것이다.

두 번째 구조적 요인으로는 세계의 중심축이 대서양에서 인도·태평양으로 이동한 점이다. 2000년대 초반에 이미 미국의 인도·태평양과의 무역은 대서양과의 무역을 넘어섰으며, 인도·태평양 지역은 세계제조업 5대 강국 가운데 독일을 제외한 중국, 미국, 일본, 한국 4개국이 자리 잡아 세계 공장의 역할을 맡고 있다. 또한 높은 경제성장률과 많은 인구를 기반으로 세계 시장의 역할도 늘려가면서 세계 경제의 기관차 역할을 맡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미국의 대외전략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국의 3대 전략 지역은 전통적 대서양 양안 관계로 연결된 유럽, 에너지와 대테러 차원에서 중요한 중동 그리고 부상하는 중국과 세계 경제의 중심축이 있는 동아시아로 구성되어 있다. 최강대국 미국도 3개 지역이 미국 본토로부터 지리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고 군사 역량과 자원에 제약이 있으므로, 통상 3개 지역 가운데 1.5개 정도

밖에 다룰 수 있다는 점을 전제한다. 따라서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밖에 없는데, 9.11 사건 이후 중동-유럽-동아시아에서 동아시아-유럽-중동의 순으로 변화하는 것은 이러한 구조적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다. 미국이 쉐일 석유·가스의 생산에 힘입어 에너지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변모하여 중동에의 에너지 의존도가 줄어든 점도 작용하였다. 현재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으로 미국의 관심이 유럽과 중동으로 되돌려지고 있지만, 중국과의 전략경쟁이라는 큰 그림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세 번째 구조적 동인은 4차 산업혁명의 진행에 따라 기술의 중요성이 커졌다는 점이다. 인공지능, 양자컴퓨팅,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블록체인, 로봇, 드론, 5·6G 등 신기술은 산업지도를 바꾸고 있으며 경제력 경쟁의 결정요소가 되어 가고 있다. 동시에 신기술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여주듯이 군사적으로 큰 함의를 가지고 있다. 미국은 제3차 상쇄전략의 핵심을 신기술에 두고 있기 때문에, 군사경쟁 상대인 중국이 이런 기술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경제안보를 강화하면서 동맹국들에게도 동참을 요구하고 있다. 각국이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에 힘을 쏟는 것도 이런 맥락이다. 또한 미국은 중국에 '위험회피(de-risking)' 정책을 통해 전략·신기술 및 반도체·2차전지·의약품·희귀금속 등 전략물자에 관해 중국과의 수출입·투자·교류·협력을 막고 있다. 미국은 무역정책에 관심이 줄어들고 산업정책에 중점을 두어 미국기업의 국내 회귀(re-shoring), 우호국 이전(friend-shoring) 등을 통해 공급망 안전을 우선하고 있다. 미국은 보수·진보 구분 없이 자유무역에서 공정·관리무역으로 변화하고 있다.

네 번째 구조적 동인은 국제사회의 경제사회적 여건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대변혁(Mega Change)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미 코로나19 팬데믹은 3년간 국제사회에 경제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으며 아직도 그 변화의 폭과 깊이를 헤아리기 어렵다. 1차 세계대전 중에 유행한 팬데믹인 스페인 독감이 5천만 명의 많은 희생자를 내고 전간기의 사회적 혼란의 불씨가 되었다는 사실은 코로나19의 심대한 영향을 예측하는데 교훈이 된다. 그리고 향후 자연환경의 황폐화에 따라 인수공통 바이러스의 팬데믹화가 더 빠른 주기로 찾아올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이와 함께 지구비등(Global Boiling)으로 인한 기후변화 대응문제도 글로벌 이슈로서 국제질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극한기후로 인한 피해는 이미 닥쳤으며, 지구 생태계 보전을 위해 설정한 2100년까지 섭씨 1.5도 상승 억제는 파리협정 체제로 도달하기 쉽지 않다. 주요 국가들이 2050년까지 탄소제로 달성을 약속하였으나, 구속력이 없다는 점에서 화석연료 퇴출과 과감한 탄소배출 감축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탄소배출이 없거나

적은 신재생에너지, 원자력 등 녹색에너지로의 전환은 화석연료를 중심으로 구축된 기존의 에너지 지정학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국제질서의 구조적 변동 요인이다. 한편 장기적으로 진행될 인구절벽 문제도 국제질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 일본의 인구감소와 관련되고 최근 '중국 절정(China Peak)'론의 밑바탕에 중국 인구감소가 거론되듯이, 아프리카 지역을 제외하고는 인구증가율이 둔화하고 있는 점도 장기적으로 국제질서에 큰 파급효과가 있다.

다섯 번째로는 미국의 신고립주의 대두를 들 수 있다.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주의 노선을 추구하여왔으나, 최근 트럼프주의와 같이 고립주의로의 회귀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미국의 상대적 국력이 저하하고 국내의 인종·소득·세대·종교 간 갈등이 깊어지면서 정치·경제·사회적으로 양극화를 초래하여 점차 내향적으로 변모하고 있다.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만들고 유지하면서 국제사회의 지도적 역할을 통해 국제주의를 실현해 왔던 미국이 역할을 축소하고 미국 우선주의, 동맹 경시, 국제공공재 부담 회피, 일방주의로 흐르게 되면, 그만큼 미국이 주도해 온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내구성을 훼손하게 된다. 미국의 리더십 없는 국제질서는 국제사회를 무질서와 혼돈의 나락으로 떨어트릴 것이다. 최근 이코노미스트가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을 올해 국제사회의 가장 큰 지정학적 위험이라고 예상하고, 미국 하버드대학 그레이엄 앨리슨(Graham Allison) 교수가 외교(Foreign Affairs)지에 트럼프는 이미 지정학적 변수로 작동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은 이런 맥락이라 할 것이다.

이처럼 미국의 국력 저하와 중국의 부상으로 촉발된 미중 전략경쟁과 다양한 국제사회의 복합전환의 구조적 요인이 결합하면서 국제질서는 변동기를 맞게 되었다. 탈냉전 시대의 종식을 극명하게 보여준 사건이 2021년 8월 미국이 준비 부족으로 아프간에서 질서 있는 철군을 하지 못 한 채 월남 패망 때의 모습을 재현한 것이다. 이와 함께 포스트 탈냉전 시대가 시작된 것을 알리는 사건은 2022년 2월 국제사회가 예상하지 못했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다. 러시아는 국제사회의 안전과 평화를 책임지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우크라이나 소재 핵무기를 철거하는 조건으로 미국, 영국과 함께 부다페스트 의정서를 통해 우크라이나의 안전을 보장한 당사자다. 이런 러시아가 정복을 목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전면 공격한 것은 중대한 국제법 위반이자 전후 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포스트 탈냉전 시대는 미국이 주도한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중국의 부상, 러시아의 지정학적 도전으로 불안정해진 상황이다. 미중 대립과 경쟁으로 세력전환 과정에서 전쟁의 위험이

높아지는 투키디데스 함정에 빠질 우려가 커졌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과 같이 지정학의 귀환으로 '힘의 공백(power vacuum)'이 생기는 단층대를 중심으로 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제체제의 불안정을 회복시킬 새로운 국제체제가 등장할 때까지 상당 기간 불안정한 표류가 예상된다. 미국의 유일 초강대국 지위가 흔들리고 내부적으로 고립주의가 부활하는 사이에 중국과 러시아의 도전 그리고 서구의 저조, 글로벌 사우스의 부상 등이 겹치면서 국제질서는 미국 우위의 다극화가 진행되고 있다.

포스트 탈냉전 시대는 어떤 특징을 가질까? 우선 국제질서에 불확실성이 현저히 증대하는 초불확실성의 세계에 진입하였다. 그리하여 확실한 것은 불확실성뿐인 세계를 맞고 있다.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위기들이 동시 다발하는 다중위기(poly-crisis)의 시대가 될 것이다. 탄력성을 갖추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라 할 것이다. 두 번째 특징은 초연결성의 사회가 될 것이다. 디지털 전환과 신기술의 발전으로 지역, 분야, 영역 간에 연결성이 깊어질 것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스라엘-하마스 전쟁과 직접 연결이 없는 것 같지만 초연결성으로 인해 서로 작용을 미치게 된다. 우크라이나전쟁에 쓰여야 할 미사일과 포탄이 이스라엘로 향한다. 우크라이나전쟁이 북한의 미사일·포탄과 러시아의 군사기술 교환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에도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초연결성의 영향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전체적(holistic)·통합적 접근이 중요하다. 셋째 특징은 초불안정의 시대라는 점이다. 다양한 변화가 빠른 속도로 동시에 진행되고 국제사회가 중층적 다극화로 변모하면서 분열과 파편화가 심화되어 국제체제가 초불안정 상태에 접어들었다. 국제사회 질서를 안정시킬 구심력보다 원심력이 더 커진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런 시대에는 유연한 대응이 중요하다. 네 번째 특징은 초변동성의 시대라 할 수 있다. 국제사회의 사안이 상호작용이 긴밀해지면서 복잡계의 영역에서 변동성의 폭과 깊이가 커졌다. 이에 따라 위기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이라 대응에 어려움이 크다. 기존의 틀을 넘는 일이 많으므로, 사안에 따라 가치를 공유하는 세력 간의 상호협력에 의해 기민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다.

포스트 탈냉전 시대의 국제질서 향방을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는 미중 경쟁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 여부와 미국이 신고립주의에 빠지지 않고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계속할 것인지일 것이다. 미중 경쟁의 결과에 관한 전망은 매우 방대한 과제이므로, 여기에서는 미국이 중국에 대해 가지고 있는 우위라 할 수 있는 요소를 잘 관리할 경우 전략적 우위를 지속할 수 있다는 점만 지적하고자 한다. 미국은 군사력, 지리, 동맹, 에너지, 금융, 혁

신, 인구, 통화, 교육, 연성권력 등에서 중국보다 훨씬 유리한 위치에 있다. 미국이 국내 정치 상황의 양극화로 인한 분열로 통치 능력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상당 기간 중국보다 유리한 위치에 설 것이다.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경제력 평가에 있어서 흐름(flow)에 해당하는 성장과 축적(stock)에 해당하는 부의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다. 중국의 성장률이 높지만, 고도성장 기간이 그리 길지 않다는 점에서, 1870년대 초 이래 세계 1위의 경제력으로 150여 년간 부를 축적해 온 미국과는 국부 면에서 많은 차이가 있다. 중국이 미국의 GDP를 따라잡더라도 부의 격차는 여전하므로, 실제로 패권의 이동이 이루어지는 데까지는 시차(time lag)가 있다. 미국이 영국의 경제력을 추월하고 실제 패권을 넘겨받는 데는 70여 년의 시간이 걸렸다는 사실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11월 대선에서 재집권하면 미국의 신고립주의 성향이 노골적으로 나타날 전망이며,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운용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질 공산이 크다. 최근 방위비 GDP 2% 분담 책임을 이행하지 않는 유럽 국가들을 비판하면서 러시아가 공격하도록 격려하겠다는 발언에서 보듯이 동맹관계에 균열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만큼 국제질서의 불안정성이 증대될 것이며 힘의 공백을 파고드는 지정학적 위기가 잦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힘을 빼앗긴 사이에 아제르바이잔이 아르메니아가 지배하던 나고르노카라바흐(Nagorno-Karabakh)를 전격 침공하여 무력 점령한 사례와 같은 무력 분쟁이 발생할 빈도가 높아질 것이다. 이에 함께 지난 80여 년간 국제질서 유지를 맡아온 미국이 국제공공재의 공급을 담당하는 책임을 회피함으로써 초래되는 킨들버거 함정(Kindleberger Trap)의 위험도 높아지게 된다. 세계 경제의 번영을 뒷받침한 해로 방위를 등한시함으로써 항행의 자유가 위협을 받는 사태가 초래할 개연성이 커지게 된다. 최근 후티 반군이 홍해 연안을 통항하는 선박을 공격하여 경제적 파장이 크듯이, 걸프만, 말라카 해협, 남중국해, 대만해협 등의 통항 안전이 위협받을 때 무역 통로가 차단되어 받을 세계 경제의 타격은 엄청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글로벌 위기 상황의 종식은 앞으로 상당 기간 보기 힘든 '불안정의 시대(era of disorder)'를 상정해야 할 것이다. 새로운 국제질서가 안정을 찾을 때까지 불안정은 국제정치의 상수로 보고 이에 대처해야 한다. 언제 안정을 찾을 것인가에 관해서는 워낙 다양한 변수의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되는 만큼 예단하기 힘들다. 다만 국제협력을 필요로 하는 글로벌 이슈가 확대일로에 있는 만큼 경쟁과 대립만이 아니라 협력도 병존할 것이다. 또한 핵무기의 상

호확증파괴(MAD)를 의식한 강대국 들이 충돌을 막으려는 관리 노력으로 방호책(Guardrail) 설정을 통한 일종의 '잠정합의(Modus Vivendi)'를 꾀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맥락에서 현재 진행 중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의 전망을 살펴본다. 이제 막 3년 차에 접어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장기 소모전의 수렁에 빠져 종식 시기를 가늠하기 어려운 상태다. 러시아가 전쟁 초기 다양한 실책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고 고전하였으나, 전열을 재정비하고 다중 방어선 구축을 통해 우크라이나의 하계 공세를 막아내면서 전선이 고착한 가운데 러시아가 다소 우세한 국면이다. 최근 미국 국방관리가 밝힌 바에 따르면, 러시아는 지난 2년간 전쟁에서 군사적으로는 2차 세계대전 이후 모든 병력 손실을 훨씬 뛰어넘고 초기에 투입한 군대의 약 90%에 해당하는 31.5만 명의 사상자와 막대한 무기 손실(탱크 2,200여 대, 항공기 130여 대, 중대함정 20여 척)을 입었다. 경제적으로는 2,110억 불의 전비, 100억 불의 무기수출 감소, 2026년까지 1.3조 달러의 예상 경제성장 손실 등 막대한 인명과 재산 손실을 보았다. 우크라이나도 군 사상자 18만 명, 민간인 사상자 2만 명에 달하고, 국내외 난민 1,012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23.1%가 집을 떠나있다. 경제적으로는 GDP가 개전 당시의 76% 수준으로 축소하고 고질적인 무역적자와 재정적자에 시달리고 있으며 약 3천억 불에 달하는 유럽, 미국 등의 군사·경제 원조로 지탱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전쟁 수행 의지를 떨어뜨리려는 러시아의 지속적 미사일·드론 공격으로 전력·수도·난방 인프라를 파괴하는 것도 시민 생활과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 우크라이나 통계에 따르면 지난 2년간 학교·병원·도로 등 21만 개소가 파괴되었다고 하니 타격이 심대함을 알 수 있다. 미국과 유럽의 무기지원과 훈련에 의존하고 있는데, 방공·대포·탄약·전투기 등에서 러시아에 크게 열세로 공세를 펴기에는 역부족이다.

그리고 최근 발생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도 우크라이나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으로 인해 우크라이나에 가야 할 무기와 탄약이 이스라엘로 전환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흩트리는 결과를 가져왔다. 또한 미국이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데 대하여 이중적 자세라고 비판하는 글로벌 사우스의 입장이 러시아의 침략과 국제법 위반행위에 대한 비판을 무디게 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현재 우크라이나 동부 일부 지역에서 치열한 공방이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전선이 교착된 상태다. 쌍방 모두 다중 방어선을 구축해 놓아 이를 격파하기 어려운 국면이다. 그러나 미국의 600억 불 군사 지원 예산이 미국 의회에서 공화당의 반대로 통과되지 않으면서 작년 12월 이

후 전선에서 포탄을 배급하는 형편으로 북한·이란에서 포탄과 미사일을 조달한 러시아와 포 공격에서 5:1의 열세로 고전하고 있다. 서방 군사전문가들은 장기전 관점에서 볼 때 우크라이나가 하계 공세의 실패로 주도권을 빼앗겨 러시아가 주도권을 가지는 '안전권(comfort zone)'에 들어갔다고 평가한다.

향후 전쟁의 향배를 결정하는 요소는 크게 군사작전, 서방 제재의 효과, 사기, 우크라이나 지원으로 볼 수 있다. 군사 면에서 볼 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인구 3.5배, GDP10배, 군사력 격차가 매우 큰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 할 수 있다. 전쟁 초기 러시아의 압도적 승리를 예상했던 이유이지만, 러시아의 작전 실패와 우크라이나의 뛰어난 항전으로 완전 정복을 면하였고 2022년 가을 이후 우크라이나 영토의 약 18%를 러시아가 점령한 상태로 전선이 교착되어 소모전을 계속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경우 전술적 적응이 뛰어난 반면, 러시아는 전략적 적응에서 앞서 장기전으로 들어가면 러시아에 유리하다는 분석이 있다. 쌍방이 현재의 전선을 중심으로 방어벽을 견고하게 구축하여 어느 쪽도 전선을 돌파할 군사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다만 러시아의 경우 군사비를 GDP 10%, 예산 40% 사용하는 전시경제를 통해 빠른 속도로 무기 생산을 높이고 있어서 양측의 전력 격차는 커질 것이다.

서방 제재는 러시아의 경제력에 직접 타격을 주는 데는 실패하고 있다. 러시아 경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석유·가스 수출이 제재 협력을 거부한 중국과 인도를 중심으로 충분한 수입선을 확보하여 서방이 제재로 설정한 60달러보다 높은 65불 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이에 따라 러시아 경제도 침공 당시 경제의 105%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2023년 26억 유로의 서방 부품이 러시아의 군사 생산에 사용되고, 포획한 러시아 무기를 분석한 결과 2,800개 정도의 외국 부품이 발견되어 제재 이행에 상당한 구멍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튀르키예,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우회로를 통한 이중용도 품목 수입의 결과로 분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러시아 경제를 압박하고 우크라이나 지원을 늘리기 위해 3천억 불의 해외 러시아 동결 재산을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늘어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천여 개의 외국기업이 철수하고 젊은 층의 엘리트들이 서방으로 탈출하면서 러시아 경제의 기반을 침식할 것으로 예상한다. 한편 무기 수입에서도 중국이 무기부품·원료·반도체, 이란이 드론, 북한이 포탄·미사일을 공급하여 우크라이나보다 우위를 확보하고 있다.

사기 면에서는 국가의 생존을 걸고 싸우는 우크라이나가 전체적으로 유리하지만, 러시아도 일반 국민들의 전쟁 지지율이 높고 인명 희생을 경시하는 전술 사용에 저항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 큰 지장이 있지는 않다. 최근 우크라이나에서 군사전략 충돌과 정치적 이유로 군 최고 지도자 2명을 교체함으로써, 전쟁 지도력에 차질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인명을 중시하고 방어 전환을 강조하여 국민의 신임이 두터웠던 전임자와 달리, 후임자는 인명보다는 공세적 자세를 중시하여 바흐무트 공방에서 큰 인력 손실을 본 전력이 있어서 젊은 세대의 신병 보충 문제와 관련 논란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

서방의 지원이 가장 중요한 변수인데 우크라이나에 불리한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지원 액수는 유럽이 미국에 비해 많지만, 무기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미국의 지원이 더 중요하다. 전쟁이 장기화하는 데 따른 '전쟁 피로증'이 서방에 퍼지면서 지원에 대한 여론의 지지율이 낮아지고 있다. 미국에서는 공화당 일부와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지원에 회의적인 여론이 증가하고 있으며, 양극화에 의한 당파정치로 하원에서 공화당이 우크라이나 600억 불 지원 예산을 11월 대선의 주요 쟁점인 멕시코 국경 봉쇄와 연계하면서 통과 여부와 시기가 오리무중이다. 이로 인해 미국의 군사 지원이 줄어들면서 전선에서 부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최근 10여 년간 우크라이나가 지배해 온 아우디이우카가 함락되어 러시아가 도네츠크 지역을 완전히 지배할 길을 열어준 사실은 단적인 예다. 미국 군사 지원액의 60~70%가 미국 내에서 무기 생산에 소요되어 미국경제에 도움이 되는 현실은 별로 고려되고 있지 않다. 특히 우려되는 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게 되면 러시아와의 타협을 통해 러시아에 유리한 조건으로 전쟁을 종결하려 할 것이고 이 과정에서 미국의 지원이 중단되는 사태일 것이다. 러시아도 이런 점을 의식하여 올해 공세를 높이고 휴전의 가능성도 거의 없을 것이다. 유럽도 500억 유로 지원 예산이 헝가리의 반대로 두 번째에 통과되었고 유럽 내 우파 정권을 중심으로 지원에 반대하는 여론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유럽 개별 국가들의 지원이 더욱 중요해졌으며, 젤렌스키 대통령이 최근 뮌헨 안보회의에 참석해 유럽의 지원을 호소하고 독일·프랑스와 안보협정을 체결하는 것도 이런 노력의 일환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제반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금년은 러시아가 전황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 2월 영국의 왕립합동군사연구소에 군사전문가 잭 월팅과 닉 레이놀즈의 기고에 따르면, ① 러시아는 2025년까지 현재의 소모전을 지속할 수 있고 2026년까지 승리해야 한다는 판단하에 움직이고 있으며, ② 우크라이나 지원국들이 러시아의 공격을 격퇴할 수 있도록 충분한 탄약과 훈련을 지원하면, 러시아가 2025년에는 별다른 진전이 없을 것이며, ③ 2026년을 넘기면 소모전이 러시아의 전투력을 실질적으로 감퇴시켜 러시아의 승리 전망이 어두워질 것이

다."라고 평가하였다.

따라서 우크라이나가 서방의 지속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제한된 반격과 장거리 공격을 병행하는 방어태세로 군사작전을 변경하면 러시아와의 소모전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승패는 우크라이나에게는 국가생존, 유럽에는 유럽안보, 미국에는 세계질서 운영이 걸려있다. 그리고 아시아에도 대만, 남중국해, 동중국해, 한반도 등 지정학적 단층에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대안의 불이 아니다. '동결된 전쟁(frozen war)'으로 끝나게 되면 러시아의 소련제국 고토 회복(irredentism) 야욕을 살려두어 유럽 안보의 화근으로 남을 것이다. 최근 유럽 정보 소식통에서 2020년대 말까지 러시아가 발트 3국과 핀란드에 침공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은 작년 10월 7일 가자를 지배하고 있는 하마스가 가자지구에 인접한 이스라엘 접경지역에서 민간인을 주로 1,139명을 사살하고 248명을 인질로 잡아가는 테러 공격을 하면서 시작되었다. 이스라엘은 즉각 하마스 절멸을 선언하고 가자지구에 군사작전을 개시하였다. 서울시의 절반 정도 면적에 237만 명이 사는 가자지구에 대한 폭격과 지상 작전은 막대한 민간인 피해로 이어져 4개월을 넘긴 현재 약 2.8만 명의 팔레스타인 주민이 사망하고 막대한 숫자의 피난민이 발생하여 인도적 재앙을 초래하고 있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은 군사력 면에서 이스라엘과 전혀 비교가 되지 않는 비국가 실체(non-state actor)인 하마스가 중동 제일의 군사력을 자랑하는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하여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인명피해를 입혔다는 점에서, 중동 전역에 큰 파문을 던지면서 확전 여부가 국제사회의 관심거리가 되었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이전에 중동은 미국이 존재를 줄이면서 러시아와 중국이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었다. 2020년 아브라함 합의를 통해 이스라엘과 아랍국가인 UAE, 바레인, 수단, 모로코가 수교하였고 사우디와의 국교 수립도 많은 물 밑 작업이 이루어져 2023년 말까지 수교 가능성이 거론되었다. 그리고 중국의 중재로 2023년 3월 중동에서 세력 경쟁을 하는 수니파의 사우디와 시아파의 이란이 관계를 정상화하여 비교적 평화로운 상태를 유지하였다.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은 팔레스타인 문제의 해결 없이 중동 질서가 굳어져 가는 데 대한 반발, 네타냐후 정부의 무리한 사법개혁 등으로 인한 이스라엘의 내부 분열, 우파 이스라엘 정부의 서안지구 정착촌 확대와 억압 등이 겹쳐 하마스의 치밀한 준비 끝에 이루어졌다. 이스라엘 군·정보 당국의 정보 실패가 겹쳐 이스라엘로서는 전혀 상상하기 어려운 피해를 보았고,

하마스는 중동과 국제사회에서 팔레스타인 문제를 다시 부각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군사작전으로 2만에서 2.5만으로 추정하는 하마스 전투원 가운데 3천-8천 명이 사망하는 타격을 입었고, 이스라엘 군의 폭격으로 가자지구 전체가 초토화되었다. 또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은 중동의 양대 갈등 세력인 이란과 헤즈볼라, 하마스, 후티 반군, 이라크·시리아 민병대 등 대리 세력으로 이루어진 시아파 초승달 연합과 수니파로 이루어진 사우디, UAE, 쿠웨이트, 바레인 등 아랍이 분열을 넘어 팔레스타인 대의를 통해 공동의 전선을 구축하게 하는 효과를 가져와 중동의 역학관계를 변화시켰다.

인질과 팔레스타인 수감자를 교환하고 인도적지원 물자를 공급하기 위한 일시 정전이 있었지만, 이스라엘이 하마스 궤멸을 위한 군사 목표를 계속 추구하면서 종전 가능성은 여전히 불확실하다.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의 지상 작전이 진행되는 가운데 늘어나는 민간인 피해에 관한 국제사회의 여론도 크게 악화하고 있다. 미국 대선에서도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바이든 대통령이 전통 표밭인 이슬람계 미국인들의 반발로 어려운 처지에 놓이고 있다.

이번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은 이스라엘이 1948년 건국 이후 치른 7회의 전쟁 가운데 비교적 오래 진행되고 있다. 1948년 독립전쟁(7개월)과 1956년 수에즈 운하 전쟁(5개월)을 제외하고는 네 번 모두 1개월 이내에 끝났다. 가자 작전이 좁은 지역에 다수의 민간인이 거주하는 시가전으로 제약이 많고, 인구 밀집 지역에 500킬로에 달하는 지하 망으로 연결된 시설들로 인해 제압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자국 인질 피해자와 국내 여론의 군사작전 지속에 대한 반발, 미국의 조기 종전 압력 등을 고려하여, 가자 남부에서 어느 정도 하마스 타격이 마무리되는 대로 지상군을 철군하되 필요에 따라 특수부대나 폭격을 통해 작전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의 향방은 확전 여부에 달려 있고, 열쇠는 이란과의 직접 충돌로 발전할지이다. 이란은 서방의 제재로 인해 경제 상황이 좋지 않고 사회적으로도 신정정치에 대한 사회적 불만이 누적되어 있으며, 군사력 면에서도 이스라엘과 미국의 군사력에 대응할 형편이 되지 않아 확전을 원치 않고 있다. 대신에 대리 세력을 통한 흔들기로 이스라엘과 아랍의 접근을 막고 미국의 존재에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도록 꾀하고 있다. 이란이 배후에서 후티 반군에게 홍해 항행을 교란하게 하거나 헤즈볼라, 이라크·시리아 내 시아파 민병대를 통해 이스라엘이나 미군을 공격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가자 전투가 종료되면 이러한 하마스를 지원하기 위한 이란과 대리 세력의 움직임도 둔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철군한 이후 가자지구의 통치를 누가 맡을 것인가라는 문제는 여전히 미지수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문제의 해결과도 직결된다. 1993년과 1995년 체결된 오슬로 합의 I, II를 통해 오슬로 평화 과정에서 추진되었고 서방과 아랍이 여전히 선호하고 있지만, 팔레스타인 양대 세력인 파타와 하마스의 수권능력 약화와 이스라엘 우파정권의 반대로 거의 추진력을 잃은 '두 국가 해법(two-state solution)'이 이번 전쟁을 계기로 되살아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결국 팔레스타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가자지구나 서안지구에서 팔레스타인인들의 투쟁을 지속되고, 이-팔 평화는 요원한 채 중동 지역의 전략 환경에 도전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팬데믹 코로나19로 국제사회의 경제사회 여건이 악화한 상태에서, 거의 동시에 발생한 2개의 전쟁은 국제질서를 더욱 혼돈에 빠트리고 있다. 조기 종전을 통해 평화를 회복해야 하겠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소모전에서 벗어나려면 앞으로 최소한 1~2년은 더 소요되고,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은 확전되지 않는 한 조만간 군사작전 수준으로 축소될 것으로 본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포스트 탈냉전 시대에 진입한 국제질서는 초불확실성과 초불안정성으로 인해 당분간 강대국간 지정학적 충돌의 위험은 커졌고 힘의 공백을 메우려는 충돌도 증가할 것이다. 한반도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대만, 남중국해, 동중국해 등 동아시아의 안보 지각판을 흔들 지진과 쓰나미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이런 복합 다중위기의 시대에 우리는 외교안보 체제를 정비해 기민성·탄력성·정보력을 키우고, 동맹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다양한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안보 위기에 대응하고 국익을 신장해 나가야 할 것이다.

【토론문】

오성대(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소장)

신각수 차관님의 고견을 듣고, 또 토론의 기회를 갖게 되어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신 차관님의 이번 발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분쟁 등으로 국제 정세가 매우 혼란하고 엄중한 시기에, 이러한 상황을 이해하고 대응해 나가는데, 있어 대단히 의미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차관님의 오랜 외교 경험을 바탕으로 한 통찰력 있는 발표로 더욱더 가슴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먼저, 차관님의 발표에서 인상 깊었던 점을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의 발발과 관련하여 그 바탕에 깊숙이 내재한 중요 요인들을 다방면으로 고찰했다는 점에서 매우 흥미롭고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차관님께서는 현재의 국제 정세에 영향을 끼친 다섯 가지 요인을 지적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2001년 9·11 테러를 계기로 촉발된 미국의 장기간의 대테러 전쟁과 중국이 WTO 가입 이후 경제성장과 함께 국제무대에서 급부상했다는 것입니다. 지난 20여 년간 미국이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등에서 전략적 실수로 국력을 소모하는 동안 중국의 국력은 빠르게 성장하였고 특히, 시진핑 집권 이후 이러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미국 주도의 자유주의 국제질서에 정면으로 도전하면서 미중전략경쟁을 촉발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울러 신흥국과 개도국의 경제력 신장으로 글로벌 사우스가 대두한 것도 국제사회의 중요한 변화의 한 요인으로 짚어 주었습니다.

두 번째가 대서양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세계의 중심축이 이동한 것입니다. 이는 앞서 지적하신 중국의 부상과도 일면 연결되는 내용 같습니다.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이라는 제조업 강국들이 세계 경제의 중심축을 인도-태평양지역으로 이동시켰고, 동시에 셰일 가스·석유

로 대표되는 미국의 에너지 혁명으로 미국의 대외 정책에서 중동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했다는 지적도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세 번째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기술의 중요성이 증대됨과 함께 미국의 경제 안보정책의 변화입니다. 미국은 군사경쟁상대인 중국이 신기술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동맹국들에게 동참을 요구하면서 동시에 이들을 아우르는 산업 공급망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코로나19 팬데믹과 기후변화와 같은 글로벌 이슈가 국제질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인구 감소 문제도 지적하셨는데, 장기적으로 국제질서 변화에 큰 파급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요인으로 미국의 신고립주의 대두를 지적하셨습니다. 지금까지의 국제질서를 설계하고 주도한 국가는 미국입니다. 그러므로 미국의 리더십이 없는 국제사회는 무질서와 혼돈이 심화할 것으로 예상되며, 따라서 미국에서 새로운 고립주의 경향이 부상하는 점은 가장 우려할 만한 요인인 것 같습니다.

차관님께서는 현 국제 정세에 영향을 끼치는 구조적 요인을 이렇게 다섯 가지로 요약하셨는데 탁월한 통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이에 동의합니다. 이러한 배경하의 포스트 탈냉전 시대는 미국이 주도한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중국의 부상, 러시아의 지정학적 도전으로 불안정해진 상황을 말합니다. 이는 또 초불확실성, 초연결성, 초불안정성, 초변동성의 특징을 지닌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글로벌 위기상황은 상당 기간 계속될 것이며 결국 불안정한 상황이 초래하는 '마찰'이 보다 빈번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차관님께서는 이러한 '불안정한 시대'에 외교 안보 체제를 정비해 기민성·탄력성· 정보력을 키우는 한편 동맹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다양한 네트워크를 구축해 위기를 극복하자는 결론을 내리셨는데, 이 또한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발표와 관련하여 제가 항상 궁금하게 생각했던 문제에 대해 고견을 듣고자 두 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신 차관님께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향후 전개 과정에서 군사작전, 서방의 대러시아 경제 제재, 양국 국민의 사기, 서방의 대우크라이나 원조 등 네 가지 요인에 주목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저 또한 이에 대해 동의합니다. 이 전쟁의 결과는 섣불리 예측하기 어렵습니다만, 어느 일방의 압도적인 승리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따라서 소모전 형태로 전개되다 어느 시점에 현 접촉선에서 휴전하는 것이 제일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기서 저는 차관님께 한가지 의견을 여쭙고자 합니다. 만약 현 접촉선에서 휴전이 된다면 이후 러시아의 행보는 어떻게 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그리고 러시아-북한의 관계는 전쟁 이전 상태로 돌아갈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밀월관계가 계속될 것인지?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대러관계는 어떻게 추진해야 할까요?

다음은 이스라엘-하마스 전쟁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차관님께서는 가자지구와 하마스에 초점을 맞추어 정세를 분석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레바논의 친이란 세력인 헤즈볼라 문제가 뜨거운 화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헤즈볼라는 과거 2006년의 분쟁에서 이스라엘군에게 큰 타격을 주었을 정도로 하마스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군사적 능력도 갖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 레바논의 헤즈볼라 문제가 터지면 중동의 이스라엘-하마스 전쟁도 장기화할 위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관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레바논 방면으로 확전을 시도할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총선 관련 북한의 도발 형태 분석

박 휘 락
(국민대학교 특임교수)

1. 들어가며

안보를 걱정할 때 1592년 임진왜란이 발발하기 전 조선(朝鮮)이 가졌던 무사안일의 태도를 자주 거론한다. 일본의 침략 가능성이 농후했음에도 대비를 계속 미루다가 2년 전인 1590년에 황윤길 등 통신사를 보내어 일본의 실정을 살펴보도록 하였고, 1591년 봄에 이순신을 발탁하여 전라좌수사로 보내는 등 일본의 침략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대비 노력을 기울이기는 했지만, 실제적인 대비 조치의 내용은 크지 않았다. 특히 1591년 봄 일본에서 돌아온 통신사 황윤길(黃允吉)이 일본의 침략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여 보고하였음에도 부사인 김성일(金誠一)은 "그러한 정상은 발견하지 못하였는데 황윤길이 장황하게 아뢰어 인심이 동요되게 하니 일의 마땅함에 매우 어긋납니다"라면서 이를 부정하였고, 선조가 물은 것은 겨우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가 어떻게 생겼던가?"라는 것이었다. 결국 선조는 김성일의 말을 믿은 채 무사안일을 지속하였고, 그 결과 7년의 임진왜란을 초래하였고, 국토를 유린당하고 말았다. 사실 이러한 행태는 몇십 년 뒤의 정묘 및 병자호란은 물론, 국권 피탈, 6·25전쟁과 관련해서도 그래도 반복되었다.

북한의 위협에 대하여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인식은 어떠한가? 선조시대, 인조시대, 고종시대의 조선, 그리고 1950년 당시의 대한민국과 다른가, 아니면 유사한가? 북한의 김정은은 12월 26~30일 열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9차 전원회의와 2024년 1월 15일 최고인민회의 14기 10차 회의 시정연설을 통하여 남북 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는 동족'이 아니라 '전쟁 중인 적대적 국가'로 재정의하면서 "유사시 핵무력을 포함한 모든 수단과 역량을 동원해 남조선 전 영토를 평정하기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라."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한국의 대부분 지식인과 국민은 이러한 명백한 위협을 위협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허풍이거나 내부의 문제를 호도하기 위한 방책이거나 북한 내부의 결속을 위한 메시지로 해석하면서 국가안보 강화 노력은 전혀 집중하지 않고 있다. 임진왜란을 비롯한 과거 사례와 크게 다른가? 다행히 현 정부와 군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북핵 대비에 관한 국민적 공감대가 약하여 기대만큼의 성과를 도출하지는 못하고 있다.

사실 지난 문재인 정부의 5년 동안 보수층의 누구도 동의하지 않는 외교적 비핵화를 추진하느라 북핵 대비를 소홀하게 하였고, 북한에게 엄청난 핵전력 증강 시간을 부여하였으며, 그

결과로 남북한 간에 엄청난 전력의 격차가 발생하고 말았다. 일부 좌파 인사들은 핵무기를 제외한 남북한 군사력 비교를 거론하면서 국민을 오도(誤導)하고자 하지만, 비핵전력으로 핵전력을 상대할 수는 없다. 특히 북한에 굴종적인 자세를 보이는 바람에 북한은 남한을 얕잡아보게 되었고, 따라서 무력 적화통일을 감행하겠다는 위협을 공공연하게 반복하고 있다. 이제는 해상 북방한계선(NLL)까지 부인하면서 자신의 해상경계선을 설정하여 무력으로 강제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한국의 일부 정치세력과 좌파 인사들은 북한의 위협을 직시하지 않은 채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는 데 급급하고, 일부 극렬분자가 국회에서 북한에 의한 무력 적화통일을 수용하자는 말해도 아무런 비판을 하지 않고 있다. 한국의 대통령은 멋대로 부르면서 김정은에 대해서는 "총비서"라는 호칭을 깍듯이 붙이듯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정체성도 확실하지 않다. 1974년 율곡 이이 선생이 만언봉사(萬言封事)에서 "기국비국(其國 非國)"이라고 했던 것을 안보에 관한 과거 정권과 현 일부 좌파 인사들의 태도와 관련하여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최근 들어서 북한이 반복하고 있는 도발적인 언사는 4월 10일로 예정된 한국의 총선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도 포함하고 있을 수 있다. 당연히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번 총선을 통하여 안일의 DNA를 가진 인사들이 국회에 많이 잔류 및 진입하는 것을 선호할 것이기 때문이다. 2010년 지방선거 두 달여 전에 북한에 의하여 자행된 천안함 폭침은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가 있었을 수 있고, 실제로 선거에서 "전쟁이냐, 평화냐"라는 구호가 등장하여 선거에 영향을 주기도 했다. 최근에도 북한이 도발만 하면 일부 인사들은 "전쟁이냐, 평화냐"라면서 국민을 협박하고, 그러한 구호를 통하여 북한의 도발을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으로 연결하고자 노력하는 것이 사실이다. 북한도 어떻게 하면 자신에게 유리한 선거 결과를 유도할 것인지를 계속 연구할 것이고, 군사도발이 유용하다고 판단되면 서슴없이 자행할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국민은 이번 총선에서 국가안보에 대한 후보자의 인식을 더욱 중요시할 필요가 있다. 북핵 위협으로부터 적극적으로 국민을 보호하겠다는 사람들을 대표로 선출해야 안보 입법과 예산이 보장될 것이기 때문이다. 몇 년 동안 북한의 선의와 한국의 대화 노력만을 강조해 온 인사들이 국정을 주도한 결과 남한은 북한의 핵무력 증강을 방치했고, 북한에게 얕보였으며, 안보불감증에 감염되고 말았다. 이제는 '힘에 의한 평화' '한미동맹' '국방의무의 신성성'에 동의하는 인사를 선출해야 할 것이다. 선거의 흐름이 이러할 경우 도발을 활용한 북한의 선거 공작은 중단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이번 총선을 둘러싼 도발이 아니다. 남한 적화통일이라는 북한의 궁극적인 목표와 그 계획이 진짜일 가능성이다. 선조나 인조 시대의 조선처럼 허풍이거나 내부용이라고 안일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최악의 상황까지 고려하여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국가안보는 원래 최악의 상황까지 예상하여 철저하게 대비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영세중립국인 스위스도 국방을 위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총선과 관련된 북한의 도발에도 현 국방부 장관이 강조하는 것처럼 "즉시, 강력하게, 끝까지"와 같은 원칙으로 적극 대응해야 하지만, 더욱 근본적으로 핵무기를 사용한 북한의 대남 무력 적화통일의 의도와 가능한 도발 형태를 분석하고, 이에 대하여 더욱 심각한 경각심을 가지면서 철저하게 대비할 필요가 있다.

2. 북한의 위협 수준

가. 북한의 핵무력 개발 목적

핵무기 개발은 너무나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어떤 국가도 분명한 목적 없이 이의 개발을 추진하지는 않는다. 그런데 북한은 대부분의 다른 나라들보다 더 분명한 국가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그들이 "조선의 유일한 합법 정부"이고, 따라서 한반도 전체를 통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북한은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한반도 전체를 무력으로 통일하고자 1950년 남한을 무력으로 침략하기도 했다. 이때 미군이 참여하여 북한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북한은 궁극적 국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미군을 한반도에서 철수시켜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이러한 차원에서 핵무기를 개발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다. 실제로 북한은 6·25전쟁의 휴전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에 핵무기를 결심하여 1952년 원자력 연구소를 설립하였다.

몇몇 학자들은 북한이 심각한 경제 상황 및 정권의 불안정성 때문에 국가 목표를 통일에서 정권 생존으로 조정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부분의 한국 좌파 지식인들과 학자, 나아가 다수의 일반 학자도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북한과의 협상을 권고하였고, 이것은 좌파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을 형성하게 되었다.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한국이 채택한 '햇볕

정책'인 2010년대 후반에 추진한 비핵화 협상이 이러한 인식에 기초한 정책이었다. 당시 학자들은 미국 정부에 북한 정권의 생존을 보장해 주면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에 기초한 정책은 북한이 핵무기를 강화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제공한 것 외에는 아무런 성과도 달성하지 못하였다.

북한과 북한의 핵무장에 대한 수정주의적 견해라고 할 수 있는 체제생존론은 확실한 증거가 없다. 북한은 통일전쟁을 하기에는 너무 가난하고, 자신의 생존을 걱정해야 할 수준이라는 민주사회의 합리주의에 기초한 추측일 뿐이다. 그런데, 사실 북한은 합리주의만으로 이해할 수 없는 국가이다. 나아가 북한이 스스로 정권이나 체제의 생존을 위하여 핵무기를 포기할 수도 있다고 언급한 적이 없다. 북한이 요구한 것은 애매한 "미국의 적대시 정책 포기"였는데, 2005년 9·19공동성명에서 미국이 한반도에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고, 북한을 핵 및 비핵 전력으로 공격하지 않겠다고 분명하게 약속했지만, 북한은 "미국의 적대시 정책 포기"를 반복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북한의 이러한 요구는 핵무기 개발과 보유를 위한 핑계일 뿐이다.

최근 북한은 한반도 전체를 통일하거나 핵무기로 남한을 공격하고 합병하려는 의도를 공공연하게 표명하고 있다. 2022년 4월 25일 김정은은 인민군 창설기념일을 맞아서 "두 번째 임무"를 위한 준비를 강조했는데, 첫 번째 임무는 미국에 대한 억제, 두 번째 임무는 대남 공격으로 추정된다. 특히 북한은 2022년 9월 개정 핵전력법에 핵전력의 임무를 명시하는 항목을 신설하였는데, 그 속에 '영토 완정'이라는 신조어를 포함하여 남한 지역을 수복하는 것이 핵무력의 목표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서론에서 언급하였듯이 최근에는 핵무력을 통한 남한 지역의 평정을 공식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나. 북한의 핵무력 수준

북한은 외부 세계와 극도로 고립되어 있기 때문에 북한 핵전력의 정확한 위력을 판단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나 출처는 없다. 대부분의 경우 북한이 20~60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하는데, 이것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 미국의 랜드(Rand)와 한국의 아산 연구소는 2023년 말에 발표한 보고서를 통하여 북한이 약 150개의 핵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1] 북한의 집중적인 핵무력 증강 노력을 고려할 때 이것이 근사할 가능성이 높다.

더욱 중요한 것은 북한은 이러한 핵무기로 미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다양한 대륙간탄도탄

(ICBM)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화성-15, 16, 17, 18로서 이 중에서 화성-18은 고체연료로서 언제 어디서든 기습적으로 발사할 수 있다. 또한 북극성-3, 4, 5 등 잠수함발사탄도탄(SLBM)도 보유하고 있고, 최근에는 잠수함발사순항탄(SLCM)도 시험 발사하였다. 2021년 1월 김정은이 핵 추진/핵무장 잠수함(SSBN) 설계 연구를 완료했다고 발표하였고, 최근에도 이의 건조에 대하여 언급한 바가 있다는 점에서 북한은 했기 때문에 조만간에 이의 개발에도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북한은 미국 미사일 방어를 고려할 필요 없이 언제든지 미 본토의 도시들을 공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된다.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했음에도 적지 않은 한국 국민 특히 좌파 인사들은 남북한 군사력 비교에서 핵무기를 제외하고자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남북한 군사력의 경우 대체적으로 양은 북한이 우세하고, 질은 남한이 우세한 것으로 평가하면서 북한이 기습공격을 가하더라도 단기적으로는 북한의 유리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결국 남한의 전쟁 수행 잠재력이 압도할 것으로 믿고 싶어 한다. 이들이 자주 사용하는 것이 세계화력지수(GFP)로서, 이것은 50개의 다양한 요소를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군사력 순위를 매기는데, 2024년의 경우 한국은 세계 5위, 북한은 36위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경제력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고, 특히 핵무기는 제대로 평가되고 있지 않다. 이 지표에 의하면 영국과 프랑스가 한국보다 낮은 6위와 11위로 평가되고 있다.

핵무기도 "무기"이고, 전쟁에서 사용된다는 점에서 핵무기를 제외한 군사력 비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미국은 태평양 전쟁에서 4년 동안 엄청난 재래식 군사력을 사용하고도 획득하지 못했던 일본의 항복을 2발의 핵무기를 성공시켰다. 특히 북한이 핵무기가 사용되지 않은 상태로 보유하고만 있어도 한국은 북핵의 효과를 무시할 수 없다. 한국은 북한의 핵무기 사용의 가능성을 언제든지 고려해야 하므로 반격과 같은 과감한 공세적 행동이 어렵고, 부대들을 분산시킴으로써 유사시 집중 운용이 어려우며, 핵 사용에 대비한 방호조치나 장비로 인하여 전투 효율성 저하 불가피하다. 우크라이나도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으로 인하여 러시아 지역에 대한 종심 깊은 공격을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그래서 이전의 모든 무기를 의미 없게 만든다는 의미에서 핵무기를 '절대무기(absolute weapon)'로 지칭하는 것이다.

---

1 Bruce Bennett, Kang Choi, Cortez A. Cooper III, Bruce E. Bechtol, Jr., Myong-hyun Go, Gregory S. Jones, Du-hyeogn Cha, and Uk Yang, "Options for Strengthening ROK Nuclear Assurance," ASAN-RAND joint report (30 October 2023), p. 17.

필자는 2018년 핵무기를 포함한 남북한 군사력 비교를 시도해 본 적이 있다. 핵무기를 독자적인 전력으로서가 아니라 재래식 전력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승수효과(multiplier) 정도로만 고려했다. 핵무기의 보유 정도에 따라 〈표 1〉에서 제시되는 바와 같이 승수효과가 달라지는데, 당시에는 북한이 신뢰적 최소 억제의 높은 수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40%를 부여했고, 한국도 미국의 확장억제로 20% 정도의 승수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재래식 군사력의 경우 북한의 양이 워낙 커서 한국의 질을 감안하더라도 한국 1: 북한 0.97로 거의 동등했다. 북한의 핵무기를 고려하는 군사력은 당시에는 한국 1: 북한 1.9로 평가되었는데, 그동안 북한이 핵무력을 더욱 증가하여 최소 억제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여 50% 이상의 승수효과를 부여하면 북한의 군사력은 한국의 2배 이상일 수밖에 없다. 만약 미국의 확장억제가 제공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남북한의 군사력은 비교 자체가 불필요할 정도로 북한의 압도적인 우세로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표 1〉 핵무기 수준별 승수효과

핵전략의 수준	승수효과(%)	이유
최대억제	100	상대방 군사력의 초토화 기능
제한억제	55-95	
최소억제	50	상대방 몇 개 도시를 파괴시킬 수 있는 군사적 능력
신뢰적 최소억제	25-45	
실존억제(핵우산)	0-20	핵전력의 최소 승수효과가 10%보다는 높을 가능성

출처: 박휘락, 2018, "남북한 군사력 비교에서의 북한 핵무기 영향 판단: 시론적 분석."『의정논총』 제13권 2호, p.234.

다. 북한의 핵전략

북한의 핵 독트린이나 핵전략에 대해서는 신뢰할 만한 정보를 획득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북한이 전략의 3요소, 즉 전략의 목표, 수단(능력), 방법(전략개념)의 균형을 유지하려고 노력해 왔다는 가정하에 북한의 목표와 수단(능력)에서 이를 유추할 수밖에 없다.

한국을 위한 미국의 핵우산 이행을 저지하는 것이 북한의 첫 번째 임무라는 점을 고려하면 북한은 미국에 대하여 파키스탄이 인도에 대하여 채택하고 있는 '신뢰적 최소 억제(credible

minimal deterrence) 전략'을 채택한 것으로 보이고, 또한 나랑(Vipin Narang)의 분류에 의하면 '비대칭적 확대 태세(asymmetrical escalation posture)'를 채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핵무기의 선제 불사용을 약속하지 않는 것인데, 실제로 북한은 한 번도 핵무기 선제 불사용은 약속한 적이 없다. 특히 북한은 2022년 핵전력법을 개정해 김정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심지어 자신들에 대한 비핵공격이 임박한 상황에서도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실제로 북한은 "신뢰적 최소 억제" 수준보다 더욱 강력한 핵전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ICBM과 SLBM인데, 이것은 영국과 프랑스가 채택하고 있는 "최소 억제 전략(minimal deterrence strategy)"의 구현을 위한 전력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북한은 2017년 수소폭탄과 최초의 ICBM을 개발한 직후인 2018년 김정은의 신년사에서 미국 본토를 공격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즉 북한은 그들의 공격에 대하여 미국이 핵우산을 제공할 경우 미 본토의 주요 도시들을 공격하겠다고 위협하고, 그렇게 하면 미국은 핵우산을 제공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SSBN을 개발하는 데 성공할 경우 완전한 신뢰적 최소 억제 전략을 구현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미국이 한국을 위하여 핵우산을 제공하는 것은 무척 어려워진다.

3. 총선 관련

가. 도발 가능성과 형태

한국에서 민주주의에 의한 선거가 반복되었고, 이것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되기를 북한이 발 것이라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북한이 한국의 총선이나 대선에 관여할 개연성은 충분하다. 실제로도 북한은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는 다양한 방법으로 총선이나 대선에 영향을 미치고자 했을 것이고, 이번 총선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제성호에 의하면 북한은 "그동안 한국의 대통령 선거(대선)와 국회의원 선거(총선) 등 권력 교체기나 주요 정치 일정 때마다 각종의 선거 공작 혹은 선거 투쟁 전술을 정교하게 구사하여…, 한국의 정치적 지평을 북한에 유리하게 만들고자" 노력해 왔다. "① 지하당을 통한 '진보정당' 구축 공작과 선거 투쟁 지령, ②

유언비어 날조나 흑색선전을 통한 선거정보 왜곡, ③ 진보정당에 선거자금 지원, ④ 해외 동포에 대한 친북 성향의 후보자 선거 독려 등의 그 방법이었다.[2]

그러나 북한의 모든 선거 개입이 파악된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북한의 대남심리전과 공작이 실제 한국 정치에 끼치는 영향을 지표·지수화한 연구 결과가 발표된 적은 없다. 그리고 위에서 언급한 것들은 대부분 비폭력적인 것이었고, 은밀한 것이었다. 선거 개입을 위하여 군사적 도발을 한 경우는 많지는 않고, 선거쯤에 북한이 군사도발을 했다고 해도 심증만 가질 뿐 객관적으로 입증하기는 어렵다. 예를 들면, 북한은 1987년 11월 29일 대한항공 858편 여객기 폭파 사건을 일으켰는데, 이것은 12월 16일 예정된 한국의 대선을 불과 19일 앞두고 발생하였다. 그러나 이것이 총선 개입 의도인지를 확신하거나 입증하기는 어렵다. 다만, 북한이 안보에 대한 보수 정부의 '무능'을 강조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주고자 시도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실제 국방부 장관과 대통령은 이번 총선을 즈음하여 북한의 도발을 우려하는 모습을 드러내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2024년 1월 3일 BBC 코리아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북한이 오는 4월 우리의 총선에 개입하기 위해 대한민국을 겨냥해 지대공 미사일 발사 등의 직접적인 군사 행동에 나설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에 의하면 북한은 2010년 3월에 천안함을 폭침시켰는데, 그해 6월 개최된 지방선거에서 "'전쟁'이냐 '평화'냐라는 구도가 형성되면서 북한이 사실상 선거에 여러 가지로 개입하는 결과가 나타났다."라는 것이다. 신 장관은 이번에도 어떤 식으로든 북한이 대한민국 총선에 개입할 수 있고, 여기에는 직접적인 군사도발도 포함될 수 있다고 진단하였다.

윤석열 대통령도 한국 총선을 겨냥한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경고하며 강력한 대응을 강조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2024년 1월 3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북한의 다각적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도발 시나리오별로 정교한 대비계획을 완비하라"면서 "압도적 대응을 통해 북한의 도발 의지를 분쇄해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그는 특히 올해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접경지 도발, 무인기 침투, 가짜뉴스, 사이버 공격, 후방교란 등 선거 개입을 위한 여러 도발이 예상"된다고 경각심을 강화하였다. 이것은 국군통수권자로서 유

2 제성호, "북한의 대남공작과 한국의 대응방향: 선거공작을 중심으로," 『전략연구』 통권 제82호 (2020. 11), pp. 90·97.

비무환의 자세를 강조하는 걱정 수준일 수도 있지만, 국가지도자까지도 북한의 총선 개입에 관하여 우려하고 있는 점은 분명하다.

실제로 북한은 이제 핵무기를 사용한 적화통일을 추진하겠다고 분명하게 공언한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와 달리 더욱 다양한 도발을 계획하거나 군사적 도발을 준비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북한은 자신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자신들이 어떤 도발을 하더라도 남한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의 국가정보원은 2023년 12월 28일 보도자료를 통하여 김정은이 "2024년 초 남한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방안을 마련하라"고 측근들에게 지시했다는 정보를 밝히기도 했다. 즉 "북한이 우리의 (국회의원) 총선거와 미국의 대선이 있는 2024년 정세 유동기를 맞아 불시에 예기치 못한 군사, 사이버 도발을 자행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다.

북한의 도발을 다양한 형태로 감행될 수 있고, 누구도 그 가능성과 형태를 사전에 판단하기는 어렵다. 누구도 북한의 전략을 알 수 없고, 북한 김정은이 어떻게 결심할지는 누구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북한이 지금까지 다양한 해상도발을 해왔다는 점에서 해상에서 동·서해 NLL을 침범하거나 남북한 해군 간의 무력 충돌을 촉발할 수 있다. 특히 최근 김정은은 NLL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발언했고, 새로운 해상국경선을 수립하여 그것을 무력으로 강제하겠다고 주장했다. 공언한 조치를 결행할 때 남북 간에는 삽시간에 긴장 상태가 조성되고, 한국의 일부 인사들은 "전쟁이냐, 평화냐" 구호로 국민을 협박하여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강화하고자 시도할 것이다. 지난 정부의 굴종과 무책임에 대해 평화를 위한 노력으로 포장하면서 현 정부를 비난하게 될 것이고, 일부 국민은 이를 추종할 것이다. 북한 수뇌부들은 이러한 계산을 바탕으로 한 득실을 계속 계산할 것이고, 도발이 유리하다고 생각하면 망설이지 않고 그렇게 할 것이다.

특히 북한은 지난 2010년 한국의 천안함을 폭침시킨 것을 하나의 성공 사례로 생각할 것이다. 최근 북한은 무인 수중 공격정을 활용하여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을 시험하였는데, 이 '해일-1형 및 2형'을 남한 항구까지 침투시켜 비핵 폭파를 시행함으로써 남한의 경계 태세가 무력함을 폭로하고자 시도할 수 있다. 당연히 지상 도발도 가능하다. 최근 북한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내 북한 병력을 다시 무장시켰고, 폭파했던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를 복원하면서 무장병력을 투입한 상태이다. 비무장지대의 경우 금방 분쟁을 촉발할 수 있고, 그 규모도 다양하게 제한할 수 있어서 점증적인 군사도발을 위해서는 효과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이외에 공중 도발도 가능하지만, 북한의 공군력이 한국에 비해서 미흡하고, 무인기 침투에 대비하여 한국이 다각적 조치를 강구한 것을 알기 때문에 그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

북한이 사이버 공간 상에서 남한의 인터넷 등 컴퓨터 네트워크를 교란하거나 혼란을 초래하고자 시도할 가능성은 낮지 않다. 한국의 경우 컴퓨터에 의존하는 정도가 높고, 도발하고 나서도 증거를 남기지 않을 수도 있으며, 추가적인 공격 가능성의 여지를 남김으로써 남한에 공포심을 부여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군대는 물론이고, 한국의 자동차와 항공기, 선박 등이 GPS 시스템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의 GPS 체제를 교란할 수도 있고, 해킹 메일의 무차별 유포 등 한국의 사이버망 전체를 어지럽히고자 시도할 수도 있다. 다만, 이 부분의 경우 일부 공격에 성공할 수는 있지만, 한국의 대비책을 강화하여 차후 공격을 어렵게 만들 수 있고, 무엇보다 한국의 투표가 수개표(手開票)를 병행하기 때문에 혼란을 주기 어렵다는 점에서 총선 관련하여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분석

상식에 입각해서 보면 한국의 총선이나 대선 시기에는 북한이 군사적으로 도발을 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다. 군사적 도발을 감행하면 남한 국민의 안보 경각심을 자극하여 그들에게 불리할 가능성이 높은 보수 정부에 대한 지지도를 높일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정치권에서 "북풍(北風)"이라고 말했던 것은 좌파 인사들이 보수정당을 비난하는 용어로 사용되었다. 즉 보수정당이 북한의 도발이나 북한의 도발적 행위를 활용하여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고 생각하고 심지어 북한과 접촉했을 수 있다고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다. 북한이 도발하면 보수정당에 대한 지지가 높아지는 것이 상식적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 총선과 관련하여 북한의 도발을 우려하는 데는 북한이 도발할 경우 보수정당에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예상이 바탕이 되어 있다. 국민은 현 정부가 안보까지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고 생각할 수 있고, 야당은 천안함 이후의 사태처럼 "전쟁이냐, 평화냐"라는 구도로 국민을 선동할 것이며, 그렇게 되면 국민은 당장의 평화를 중요시하여 보수정당을 덜 지지할 것이라는 예상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북한은 한국에서 좌파 정당이 정치를 장악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보다 북한에게 더욱 유리한 정당이 한국에 존재한다는 것부터 심각한

문제의식으로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은 핵무기를 활용해서라도 한국을 적화통일하겠다고 공공연하게 주장하고 있는데, 한국의 일부 정당은 북한에게 우호적이라는 말이 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안보에 관해서도 정당 간에 뚜렷한 시각차가 존재하고, 나아가 안보도 정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당연히 이것은 잘못되었고, 북한의 도발 가능성보다 이러한 현상에 대한 반성과 시정이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우리가 잘못하여 야기된 결과이고, 우리가 노력하면 고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의 일부 인사와 정당은 북한이 도발을 자행했을 때 북한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거나 정부의 무능을 공격함으로써 한국의 안보태세를 약화해 온 점이 없지 않다. 신원식 장관이 지적한 대로 2010년 천안함 사태에 관하여 야당은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정부의 신뢰성을 훼손함으로써 북한의 도발 행위를 그다지 문제 삼지 않는 모습을 보였고, 북한의 위협을 활용하여 국민에게 "전쟁이냐, 평화냐"를 선택할 것을 강요하기도 했다. 지금도 현 정부가 주장하는 "힘에 의한 평화"는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추구하는 보편타당한 안보의 지향방향인데도, 일부 좌파 인사들은 이것으로 인하여 남북한 간의 긴장이 고조되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최근 비판이 증대되고 있지만, 과거 학생운동이나 시민운동을 해온 인사들은 안보에 관하여 일반인들의 상식과 매우 다른 인식을 갖는 측면이 있다. 그들은 민주화 투쟁을 하는 과정에서 "적의 친구는 적"이고, "적의 적은 친구"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권위주의 정권을 지원한다고 생각하는 미국과 일본에 대해서는 적대적인 인식을 갖게 되었고, 그 권위주의 정권의 적인, 북한은 오히려 동경하는 인식을 갖게 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들 중 상당수가 2000년대 초반부터 한국의 정치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한 때 한국의 외교안보정책은 반미일과 친중국과 친북한의 방향을 지향하게 되었고, 현재도 그 잔재가 적지 않게 남아 있다.

현재 한국의 좌파 인사들의 상당수는 안보에 관하여 심각한 안일에 빠져 있는 듯 보인다. 북한이 한국을 절대로 공격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안보는 아예 국정의 과제로 생각하지 않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국가안보를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있는데, 분단국이 한국의 일부 인사들은 안보를 전혀 걱정하지 않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들은 자신들만 걱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국민에게 걱정하지 않도록 선동까지 한다. 심지어 일부 인사들은 국회에서 세미나를 개최하면서 북한이 적화통일을 시도할 경우 이것을 수용

해야 한다는 투의 주장까지 버젓이 공개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임진왜란, 정묘 및 병자호란, 6·25전쟁 직전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다.

북한이, 이번 총선을 통하여 이러한 한국의 분열을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도발을 검토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김여정은 2024년 1월 2일 담화를 통하여 "지금 조선반도 형세가 당장 전쟁이 터져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매우 위태롭게 되고 안보 불안이 대한민국의 일상사가 된 것은 전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공로'"라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평화 보따리를 내밀어 우리의 손을 얽어매놓고는 돌아앉아 제가 챙길 것은 다 챙기면서도 우리가 전망적인 군사력을 키우는 데 제약을 조성"하였다면서 두 대통령을 다르게 평가함으로써 국내의 분열을 자극하려는 의도를 보이기도 했다.

결국 총선에 관한 북한의 도발 여부는 우리 국민들의 자세에 달려있다. 북한의 입장에서 군사적으로 도발하는 것이 현 정부를 비롯한 한국 보수정권의 정치적 입지와 권력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리라 생각하면 군사적 도발을 감행할 것이다. 반대로 북한이 도발할 경우 우리 국민들이 더욱 단결하여 보수정권의 입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투표권을 행사할 것으로 판단하면 북한은 도발을 자제할 것이다. 유감스럽지만 현재로서는 전자의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4. 총선 이후 북한의 전쟁도발 가능성

최근 다수의 미국 전문가들이 남한에 대한 북한의 핵공격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 2024년 1월 미국의 북핵 전문가인 칼린(Robert L. Carlin)과 헤커(Siegfried S. Hecker)는 현재가 1950년의 상황보다 더욱 불안정하다면서 김정은이 전쟁 수행을 위한 결정을 내렸다고 평가하였다("Kim Jong-un has made a strategic decision to go to war").[3] 또한 1990년대부터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온 갈루치 (Robert Gallucci) 역시 북한의 핵공격 가능성을 높게 보면서 "2024년에 동북아시아에 핵전쟁이 발발할 수 있다는 생각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3 Robert L Carlin and Siegfried S. Hecker, "Is Kim Jong Un Preparing for War?" Informed analysis of events in and around North Korea, 38 North (11 January 2024), https://www.38north.org/2024/01/is-kim-jong-un-preparing-for-war/

("We should at least entertain the thought that a nuclear war could break out in Northeast Asia in 2024")고 언급한 바 있다.[4] 이에 대하여 국내 전문가들은 대부분 과도한 평가로 일축하고 있지만, 북한의 최근 주장과 결합하여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할 수 있다.

가. 북한의 전쟁 발발 가능성

북한이 전쟁을 발발할지는 알 수 없다. 상대방의 의도를 안다는 것은 불가능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프로이센의 군사이론가인 클라우제비츠(Carl von Clausewitz)는 전쟁과 관련하여 가장 유념해야 할 사항은 "불확실성(uncertainty)"이라고 한다.

큰 범위에서 봤을 때 북한이 전쟁을 선택할 수 있는 개연성은 낮지 않다. 세계에서 극도로 고립되고, 경제적으로 빈한하며, 다양한 국제제재를 받는 북한이 장기적으로 생존할 것으로 믿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경우 현재와 같은 어려운 상황이 지속될 수밖에 없고, 일부 학자들이 예측하듯이 북한이 붕괴할 수도 있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핵무기를 보유하려니 미국을 중심으로 한 유엔의 경제 제재가 지속되고 있어서 국가의 발전을 도모할 수가 없고, 그렇다고 하여 핵무기를 포기할 경우 과거 동구권의 사례처럼 내부에서 심각한 분란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경제발전에 성공할지 확신하기도 어려울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는 한국을 정복하여 그 부를 탈취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고, 상황이 이렇게 심각하고, 어렵게 개발한 상당한 핵전력이 있음에도 전쟁에 의존하지 않는다고 믿기는 어렵다.

지금까지 북한이 공격하지 못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미국의 적극적인 개입 가능성인데, 북한은 수소폭탄, ICBM, SLBM을 개발함으로써 미군이 쉽게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수단을 확보하였다. 또한 과거에는 북한이 서울을 공격할 경우 미군을 공격할 수밖에 없어서 미국의 개입 확실성이 컸었고, 그것을 인계철선(trip wire)이라면서 중요하게 평가했지만, 지금은 대부분 미군이 평택지역으로 이동한 상태이다. 즉 북한은 미군을 공격하지 않은 채 서울을 공

4 Robert Gallucci, "Is Diplomacy Between the U.S. and North Korea Possible in 2024?" Blog, National Interest, January 11, 2024, https://nationalinterest.org/blog/korea-watch/diplomacy-between-us-and-north-korea-possible-2024-208528

격할 수 있게 되었고, 따라서 서울에 대한 기습공격의 가능성은 높아졌다고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의 미흡한 대비태세는 북한에게 공격할 경우 성공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하게 만들고 있다. 북한과 비핵화 협상이 시작된 이후부터 한국의 정치지도자는 물론이고 군 수뇌부도 북한에 대한 경계심을 낮춘 상황이고, 북한의 핵공격 가능성에 대한 대비태세는 거의 무관심하였다. 새로운 보수 정부가 들어섰고, 최근의 북한 도발로 북핵 대비에 대한 강도를 높이고는 있지만, 그동안 미흡했던 정도가 커서 단기간에 신뢰할 만한 대비 수준을 갖추기는 어렵다. 2019년 북한의 입장에서 전쟁 발발에 영향을 주는 국제정세, 국내정세, 군사력, 기타 국력, 주민 측면 등 11개 요소를 적용하여 1950년 6·25전쟁 발발 당시와 현재를 비교한 후, 북한에게는 현재가 6·25전쟁 발발대비 2배 가까이 (6·25전쟁 12 : 현재 22) 더욱 유리하다고 평가한 사례도 있다(김기호, 2019).

〈표 2〉 북한의 공격 유리성 비교 (6·25전쟁과 현재)

구분	6·25	현재	구분	6·25	현재
국제정세	1	2	지도자	3	3
국내정세	1	2	정치	1	2
핵전력	0	4	경제	1	1
재래식전력	1	1	외교	1	1
무형전력	1	2	주민	1	2
군사전략	1	2	**종합**	12	22

* 출처: 김기호, 2019, "6·25전쟁, 그때와 지금: 북한의 능력과 전략 비교 평가." 이언주 의원실·국방선진화연구회 공동주최 6·25전쟁 상기 특별세미나 자료집 (6월 20일), pp. 30-31.
* 점수는 북한의 입장에서 유리한 정도

일부에서는 북한의 미흡한 경제력으로 인하여 북한의 전쟁지속력이 매우 낮고, 따라서 전쟁을 발발할 수 없다고 하지만, 식량과 유류의 경우 한국에게 현지 조달하여서 사용하면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고, 무기 및 장비나 실탄의 경우 단기 작전은 지속 가능할 뿐만 아니라 한국군에서 탈취하여 사용하는 방법도 불가능하고, 특히 기습을 통하여 심리적으로 마비시켜

버릴 경우 전투 자체가 최소화될 수 있다. 또한 수도권에 대한 제한 공격 등으로 목표를 제한하거나 작전을 단계화하는 방법 등으로 군수지원 제한의 영향을 최소화하면서도 전체 목표를 달성할 방법은 충분히 가용하다.

나아가 전쟁은 오인식(misperception)을 비롯한 다양한 비합리적인 요소에 의하여 발생하는데, 북한이나 북한 지도자의 합리성이 통상적인 수준에 비해서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 북한 체제의 폐쇄성과 경직성을 고려할 때 최선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확하고 충분한 지식과 정보의 유통이 가능하지 않을 것이고, 최선의 대안을 자유롭게 선택하거나 선택한 방향을 융통성 있게 변경할 수 있는 합리적 환경이기도 어렵다. 즉 북한이 현실을 정확하게 평가하지 못함으로써 합리적이라면 하지 않아야 할 전쟁을 발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나. 북한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

국민의 상당수는 동일 민족이라는 점을 고려하거나 미국의 응징에 의하여 북한이 파멸될 것이 두려워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없을 거로 생각하지만, 북한은 한반도 공산화를 달성해야 한다는 이념적 사명감이 너무나 크고, 핵무기 개발 자체가 6·25전쟁에서 실패한 것을 다시 성공시키기 위하여 시도한 것이다. 현재 북한은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ICBM과 SLBM을 보유하게 된 상태라서 미국의 확장억제를 역으로 억제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미국이 막강한 핵전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북한은 핵무기를 먼저 대규모로 사용하여 그들의 공산화 통일목표를 조기에 달성하고자 시도할 수 있다.

실제로 핵무기를 개발한 이후 북한은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언급해 왔다. 2014년 11월 유엔에서 대북 인권 결의안이 통과되자 북한은 "핵전쟁 터지면 청와대 안전하겠나"라고 협박한 적이 있고, 김정은은 2016년 3월 현재 배치된 핵무기를 "임의의 순간에" 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는 "김정은(노동당 위원장)은 한국 국민에게 정말로 핵을 쓴다... 2013년 채택한 핵·경제 병진 노선은 핵무기와 같은 대량 살상 무기를 만들어 한국이라는 실체 자체를 불바다로 만들어 한국군을 순식간에 무력화시키려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2017년 8월 25일 백령도에 대한 상륙작전을 지도하면서 김정은은 "서울을 단숨에 타고 앉으며 남반부를 평정할 생각을 해야 한다."라고 지시한 바 있다. 그리고 2022년 9월에는 상대방의 공격이 임박한 상황에서도 핵무

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등 다섯 가지의 핵무기 사용 조건을 열거하였는데, 그 내용을 함축하면 김정은이 결심만 하면 북한은 언제든지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공언이다.

실제로 북한의 전쟁 수행 계획에는 핵무기와 재래식 무기의 결합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으로 현 정권에서는 관심을 갖지 않았지만, 이전 정부까지는 다양한 북한이 남침 계획이 소개되었는데, 핵무기 위협이 포함되어 있고, 당연히 이러다가 핵무기를 사용할 수도 있다. 즉 북한이 핵미사일로 미국과 일본을 위협하여 개입을 저지한 상태에서, 수십만의 특수전 부대로 남한의 핵심 시설을 타격한 후, 제1 제대와 제2 제대의 군대들을 통합하여 한국군 방어 지대를 조기에 돌파하는 기동전을 수행하여 3~5일 만에 부산을 점령한다는 소위 "3일 전쟁" 계획을 수립하였다고 보도된 바도 있었고, 유사한 방법으로 "7일 전쟁" 계획을 만들었다는 주장도 있었다.

다. 가능한 북한의 도발 시나리오

〈핵위협 하 국지도발〉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한 상태에서 한국과 미국의 대응 의지를 시험해 볼 수 있고, 그를 위하여 핵위협하에서 다양한 형태의 국지도발을 검토할 수 있다. 2010년의 경우와 같이 한국의 군함을 공격하거나 한국의 영토에 포격 등을 가할 수도 있지만, 백령도를 비롯한 서북 5개 도서를 기습적으로 공격하여 점령하는 각본도 배제하기는 어렵다. 북한은 백령도로부터 30분 거리에 있는 고암포에 대규모 상륙정들을 보유하고 있고, 연평도 포격사태에서도 드러났지만 서북도서가 공격을 받을 경우 거리상으로 한국이 이에 지원세력을 즉각 투입하는 것이 쉽지 않고, 특히 북한이 악천후를 활용하여 공격할 경우 한국의 지원을 더욱 어려워진다. 한국이 적극적으로 대응하더라도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겠다고 위협할 경우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은 많지 않다. 연평도 포격 이후 한국이 천명한 바와 같이 황해도에 있는 북한의 지휘부를 타격할 수도 있지만, 쉽게 시행을 결심할 수는 없고, 시행 여부를 둘러싸고 국론도 분열될 것이다.

한국 정부나 한국군은 북한이 공격하기 이전에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겠지만, 실제 사태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렇게 못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이 핵무기의 개발에 확실하게 성공하지 못한 2010년 북한이 백주 대낮에 연평도에 포격을 가한 상황에서도 전혀 단호한 조치를 강구하지 못하였는데, 대규모의 핵무기를 보유하게 된 현 상황에서 다르게 조치할

것으로 추정하기는 어렵다. 서북 5개 도서는 유엔군 또는 한미연합사령관이 관리하는 지역이 아니라는 점에서 미군이 나서기도 쉽지 않고, 이러한 이유로 북한이 서북도서를 국지도발의 대상으로 삼을 가능성이 높다.

〈핵위협하 수도권에 대한 제한적 공격〉

남한과 미군의 의지를 시험하거나 실제 점령을 목적으로 북한이 감행할 수 있는 가장 심각한 각본은 북한이 핵무기의 사용 가능성으로 위협하면서 수도 서울에 대한 제한적인 공격을 감행하는 것이다. 서울은 휴전선으로부터 40km밖에 이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최근 다양한 자동차 전용도로가 남북으로 발달되어 있어서 북한이 마음을 먹을 경우 밤사이에도 서울까지 진출할 수 있다. 북한으로서는 정치, 경제, 사회의 중심지인 서울만 점령할 경우 남한을 통합하는 것은 시간문제일 뿐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더군다나 최근에 서울을 기습적으로 점령하는 데 유리한 조건이 조성되고 있다. 남북한 군사합의서로 인하여 한국군은 휴전선 근처에 대한 적극적인 정찰은 물론이고, 훈련도 충분히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북한의 기습적 도발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거나 알았다고 하더라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특히 철원 지역에는 6·25전쟁으로 인한 유해 발굴을 위하여 지뢰를 제거한 후 12미터 폭의 도로를 개설해 둔 상태이고, 김포 지역도 남북한 간 민간인에 의한 공동 활용을 명분으로 한강하구에 대한 사항을 조사하여 북한에게 그 정보를 전달해 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이 두 지역을 활용하여 서울을 포위할 수 있다. 파주-문산 지역에서는 전방 지역 한국군에게 비지속성 화학작용제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은 사이버전 역량을 최대한 동원하여 한국의 기간산업 및 행정망을 마비시킬 것이고, 한국도 어느 정도 대응하거나 복구하게 되겠지만 적지 않은 혼란을 겪게 될 것이다.

특히 북한은 서울 점령 이후에는 군사적 활동을 돌연 중지하고 일방적 휴전을 선언하면서 협상을 요구할 것이다. 협상이 시작되면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가 한 바 그대로 대부분의 서울시민이 북한과의 합병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그들의 합병투표를 허용한다는 점을 발표할 것이다. 실제로 합병 여부에 대한 찬반 투표를 한 후 그 투표 결과에 근거하여 합병을 선언하고, 서울이 북한의 영토라고 주장할 수 있다.

〈핵위협하 전면 공격〉

북한이 핵무기의 사용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6·25전쟁에서와 같이 전국적인 범위에서 남한에 대한 기습공격을 감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서울을 확보한 후 상황에 따라 전국 점령으로 확대한다는 단계적 접근은 시간이 걸리고, 그사이에 어떤 변수가 발생할지 알 수 없어 불안하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그들의 사이버전 역량을 최대한 동원하여 한국의 기간산업 및 행정망을 마비시킬 수 있고, 그렇게 되면 한국의 저항력은 무력화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북한은 평택을 비롯하여 모든 미군부대 지역을 우회하거나 포위하는 방향으로 공격계획을 수립할 가능성이 높다. 미군을 공격할 경우 미국 대통령에 의한 즉각적인 전쟁 선포와 증원군 투입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군이 야포 사정거리 내에서 평택의 미군기지를 위협할 경우 미군의 활동이 위축되지 않을 수 없고, 미군은 더욱 남쪽으로 이동하여 축차적 방어진지를 점령할 수도 있지만, 선박을 통하여 일본이나 괌 등으로 자발적으로 철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즉 만약 미군이 후자를 선택할 경우 북한은 미군이 없는 남한을 핵무기 사용으로 위협하면서 손쉽게 굴복시킬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공격하기 위하여 북한은 사전에 여러 개의 핵무기를 한국의 주요 도시에 투하한 후 한국이 극도로 혼란하게 만든 다음에 공격할 수도 있고, 핵무기 공격으로 단순히 위협할 수도 있지만, 전면 공격을 의도할수록 핵무기의 초기 사용 가능성은 높아진다. 아산정책연구원과 Rand 연구소는 2021년 보고서를 통하여 북한은 개전 초기에 40~60개의 핵무기를 사용할 수도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북한은 핵무기를 사용하여 한국의 발전소나 변전소, 전산망의 허브, 식수 공급체계, 물류 및 교통센터, 중요 군수시설 등 핵심 시설을 타격함으로써 한국의 국가체제를 마비 또는 무력화시키고자 시도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

이러한 개념하에서 북한군은 파주-문산 지역의 부대들은 초반의 치열한 포격전을 전개하면서 일부 전진함으로써 주공 방향을 기만할 가능성이 높고, 오히려 철원 축선과 김포 축선에서 집중적인 돌파와 도하를 감행한 후 서울을 우회하여 남방으로 진격함으로써 평택을 조기에 위협할 가능성이 높다. 북한군은 다양한 특수전부대들을 평택항을 제외한 지역에 투입하여 혼란을 조성함으로써 평택항을 통한 철수 이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미군이 판단하도록 유도할 가능성이 높다. 북한군은 동해안의 7번 국도상으로도 상당한 규모의 집중적인 돌파를 감행한 후 부산을 향하여 빠르게 진격할 것이고, 이를 통하여 한국이나 미국으로 하여금 북한의 목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게 만들 수 있다.

5. 결론

영세중립국인 스위스가 상당한 규모의 군대를 유지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발달한 핵대피 시설을 보유하고 있듯이 국가안보와 국방의 요체는 최악의 상황에 대한 대비이다. 개인의 경우 보험을 드는 것과 유사하다. 이런 차원에서 일반적인 시각에서 보면 현재의 한국만큼 심각한 안보위협하에 놓여있는 국가는 없다. 일부 미 전문가들이 핵전쟁의 가능성을 경고하듯이 김정은은 핵무기를 통한 적화통일을 공공연하게 주장하고 있고, 실제로 그를 위한 핵무력 증강을 가속화하고 있다. 당연히 한국의 총선 관련하여 다양한 도발 방법도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다행히 현재의 한국 정부와 군대는 북핵 위협을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한미동맹 강화와 삼축체계 능력 확충 등 필요한 조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미국의 핵우산에 대한 계획과 이행에 한국의 참여 정도를 높여서, 한국의 자위권(right of self-defense)에 의한 핵대응을 보장하여 핵억제력을 강화하고, 비록 재래식 전력이지만 북한의 김정은이 핵전쟁을 결심하면 그를 바로 제거하겠다는 점을 수시로 강조함으로써 북한 지도부의 핵전쟁 결심을 억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정부와 군을 중심으로 국민을 더욱 단결할 필요가 있고,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견해가 다르더라도 일부 좌파 인사들은 국가안보와 국방에 관한 한 정부 및 군대와 생각을 같이 하면서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그런데 현실에 있어서 일부 좌파 인사들과 이들에 의하여 휘둘리고 있는 일부 정치인 및 정당들은 국가안보와 관련하여 심각한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이들은 북한의 위협을 평가절하면서 "평화냐, 전쟁이냐"의 논리를 오히려 안보 불안을 그들의 정치적 이익의 기회로 활용하고자 한다. 그리고 일부 국민도 이에 선동당하는 모습이다. 이러한 점에서 북한의 김정은은 한국의 총선과 관련하여 도발을 감행함으로써 그들에게 유리한 정치인이나 정당이 한국 정치에서 더욱 큰 영향력을 갖도록 만들고자 노력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한국에는 국가안보에도 좌우, 여야가 있고, 이것이 북한의 도발을 유혹하고 있는 셈이다.

국민들이 달라져야 한다. 과거 임진왜란, 병자 및 정묘호란, 6·25전쟁의 교훈을 되살려서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대비하라"라는 인식해야 한다. 정부와 군대가 추진하고 있는 "힘에

의한 평화"를 적극적으로 지지 및 지원해야 한다. 특히 이번 총선에서 투표하는 기준 중에서 중요한 기준 중 하나로 특정 후보의 안보에 대한 태도를 고려해야 한다. 그리하여 북한에게 한국의 모든 국민이 철저하게 단결되어 있다는 점을 과시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북한 도발 억제 및 대비책이라고 할 것이다.

일부 좌파 인사들은 자신들의 생각이 과연 타당하고 자신들의 자식과 손자들에게 바람직한 미래를 물려줄 수 있는 생각인지를 점검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솔직하게 인정하면서 시정할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 내의 문제로는 어떤 사안이든 다양한 생각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안위가 위태로워지는 방향의 생각을 고집해서는 곤란하다. 임진왜란 때 일본이 쳐들어오지 않을 것이라고 했던 지식인들은 그들의 말에 대하여 책임질 수 있었던가? 국가안보가 잘못되면 누구도 책임질 수 없고, 따라서 다소 지나치는 점이 있더라도 언제나 최악의 사태까지 상정하여 대비하는 것이다. 북한이 핵무기로 남한을 공격하여 평정하겠다는데도 불구하고, 감상적인 통일론이나 북한 인식에 빠져 있는 것은 자신의 일시적인 정치적 이익을 위하여 자식과 손자들의 미래를 도박하는 것에 불과하다.

【토론문】

김 귀 근(연합뉴스 군사전문기자)

□ **최근 북한의 공세적인 행보가 주목된다.**

1. 김정은 입에서 자주 언급되는 단어 '전쟁'

- 1월 8~9일 중요 군수공장 시찰 "조선반도에서 압도적 힘에 의한 대사변을 일방적으로 결정하지는 않겠지만 **전쟁을 피할 생각 또한 전혀 없다**", "대한민국이 우리 국가를 상대로 감히 무력 사용을 기도하려 들거나 우리의 주권과 안전을 위협하려 든다면, 그러한 기회가 온다면 주저 없이 수중의 **모든 수단과 역량을 총동원해 대한민국을 완전히 초토화해 버릴 것**"

- 1월 15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 회의 시정연설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평정·수복하고 공화국 영역에 편입시키는 문제를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개정 헌법을 차기 최고인민회의에서 심의해야 한다". "우리 국가의 남쪽 국경선이 명백히 그어진 이상 불법 무법의 북방한계선을 비롯한 그 어떤 경계선도 허용될 수 없으며 **대한민국이 우리의 영토·영공·영해를 0.001㎜라도 침범한다면 그것은 곧 전쟁 도발**"

- 2월 1일 남포조선소 방문 "오늘날 나라의 해상 주권을 굳건히 보위하고 **전쟁 준비**를 다그치는 데서 해군 무력 강화가 제일 중차대한 문제"

- 2월 8일 북한군 창건일 국방성 방문 "**전쟁은 사전에 광고를 내고 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금 상기하자**. 항상 임전 태세를 유지해야 한다."라며 "적들이 감히 우리 국가에 대고 무력을 사용하려 든다면 역사를 갈아치울 용단을 내리고 우리 수중의 모든 초강력을 주저 없이 동원하여 적들을 끝내버릴 것"

※ '영토 완정' 용어도 등장 → 핵무력으로 남한을 점령하겠다는 의지 표출

- 2022년 9월 '핵무력 법제화' "핵무력은 외부의 군사적 위협과 침략, 공격으로부터 국가 주권과 **영토 완정**, 인민의 생명 안전을 수호하는 국가방위의 기본 역량"
- 2017년 11월 29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 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하며 국가 핵무력 완성을 주장. "전략무기 개발과 발전은 전적으로 미제의 핵공갈 정책과 핵위협으로부터 나라의 주권과 **영토 완정**을 수호하고 인민들의 평화로운 생활을 보위하기 위한 것."(북한 '정부성명')

2. 한미, 한미일 이간 기도

- 대한민국에는 전쟁 불사, 초토화 같은 협박을 가하면서도 미국에 대해서는 유화적인 화법 구사하고 있음. 예를 들어 작년 4월 첫 고체 연료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 시험발사 후 "주변 국가들의 안전에 그 어떤 부정적 영향도 주지 않았다."라는 주장 등임

-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담화(2.14) "일본이 우리의 정당방위권에 대해 부당하게 걸고 드는 악습을 털어버리고 이미 해결된 납치 문제를 양국 관계 전망의 장애물로만 놓지 않는다면 두 나라가 가까워지지 못할 이유가 없을 것이며 (기시다) 수상이 평양을 방문하는 날이 올 수도 있을 것"
  → 일본 교도통신 "한미일 협력 강화에 강하게 반발하는 북한이 일본에만 대화의 추파를 던져 3개국 체제를 동요시키려는 생각이 있는 듯하다."라고 분석

3.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고 대남기구 정리, 통일 용어 삭제

2023년 12월 30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전원회의 "북남(남북) 관계는 더 이상 동족관계, 동질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 전쟁 중인 두 교전국 관계로 완전히 고착됐다."

- 이후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민족경제협력국, 금강산국제관광국, 6·15 남북공동선언 실천 북측위원회,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북측본부, 민족화해협의회, 단군민족통일협의회 등 폐지

- 북한 국가 도메인(kp) 이용하는 평양방송 수신 불가, '우리민족끼리', '통일신보' '구국전선', '려명' 등 대남·대외 선전매체 접속 불가. 북한 국가에서 한반도 전체를 뜻하는 '삼천리' 단어 삭제. 양 지하철 노선도 '통일역'에서 통일 삭제

□'전쟁' 협박하는 북한, 실제 전쟁 능력 있나?

1. 전쟁 가능성 있다 없다 주장

- 대니얼 러셀 아시아 소사이어티 부회장(전 국무부 동아태차관보) "김정은이 충격적인 물리적 행동을 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 갈루치 조지타운대 명예교수(1990년대 1차 북핵 위기 당시 미국의 협상 대표) 외교안보 전문지 '내셔널 인터레스트' 기고 "2024년 동북아시아에서 핵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을 최소한 염두에는 둬야 한다."
- 미국 스탠퍼드대학 지그프리드 해커 박사와 미들베리국제연구소의 로버트 칼린 연구원, 38노스에 기고한 글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언제, 어떻게 (전쟁의) 방아쇠를 당길지 모른다."

2. 전쟁 가능성 희박 주장

- 블룸버그, 북한 경제 전문가 분석 인용(1.26) 북한 정권의 호전적인 발언은 그저 '공갈'일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
- 영국 BBC, 전문가들 인용해 북한이 실제로 전쟁을 결심한 것 아니냐는 분석과 견해에 동의하지 않는다. 북한의 최근 행보가 이례적이지만 이는 전쟁이나 전면전이 목표가 아니라 협상을 위한 포석이라고 평가

3. 북한 전쟁 지속 능력 추정치만 믿을 것인가?

- '2020 국방백서' "북한은 전시에 약 1~3개월 정도 전쟁을 지속할 수 있는 전쟁물자 확보 추

정, 전쟁 지속 능력은 군사 분야뿐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기반시설과 같은 다양한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

→ 북한은 핵을 개발했다는 점에 유의해야

→ 발제문 "남한 적화통일이라는 북한의 궁극적인 목표와 그 계획이 진짜일 가능성이다. 선조나 인조 시대의 조선처럼 허풍이거나 내부용이라고 안일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최악의 상황까지 고려하여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주장에 공감

□한국 총선, 미국 대선 겨냥 무력 도발 가능성

- 북한은 3월과 4월 한미연합훈련 및 4월 총선을 겨냥해 서해 NLL, 무인기, 사이버공격 등 도발 가능성. 특히 도발 원점과 주체가 불분명한 도발 가능성을 경계해야 함. 미국 대선 전에는 7차 핵실험이나 ICBM·IRBM 정상각도 발사 등으로 바이든 행정부를 코너로 몰아갈 의도도 유의해야 함.

※ 김영호 통일부 장관 요미우리 인터뷰(2.9), 4월 총선과 11월 미국 대선 앞두고 북한 군사적 도발 지속할 가능성

※ 김성한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팟캐스트(2.14), 한국 총선을 앞두고 북한이 국지적인 무력 도발에 나설 가능성

※ 국가정보원(2023.12), 김정은이 ICBM 화성-18형을 발사(12.18)한 후 측근들에게 "내년 초 남한에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

□북한 핵 위협에 NCG 가동만으로 괜찮은가? 전술핵 재배치 협의는 왜 소극적인가?

- 북한 전술 핵탄두 '화산-31' 위력 10kt(킬로톤·1kt은 TNT 1천t 폭발력) 안팎으로 추정. 600㎜ 초대형 방사포(KN-25), 무인수중공격정 해일, 화살-1,2 순항미사일, KN-24(에이태큼스), 미니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10종 이상의 무기에 탑재할 수 있다고 선전

- 아산정책연구원과 미국 랜드연구소 '한국에 대한 핵 보장 강화 방안' 공동 연구보고서 (2023.10.30.) "김정은은 2030년대가 되면 최대 300~500개까지 핵탄두를 보유하려 할 것"

- 한미 NCG에 따라 6월까지 핵전략 기획·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 제정, 8월 을지프리덤연습 때 한미연합 핵작전연습 시행, 미국 전략자산 전개 강화. B-52 괌에서 핵폭탄 탑재해 한반도까지 10시간가량 소요.

  → 전술핵 재배치 협의에 소극적 자세. 마침 미국이 B61 전술핵무기 100기가량을 현대화하고 있는 만큼 이를 한국에 배치하거나 미국에 두고 '한국 안보 지원용'으로 지정하는 주장 설득력 있어 보임. 전술핵 재배치 또는 지정은 '공포의 균형'을 이뤄 오히려 북한이 핵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효과도 있을 것임.

북한의 '헤어질 결심'과 '전쟁 결심'
: 의미 및 한계

박 원 곤
(이화여자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통일학연구원장)

■ 김정은이 선포한 '헤어질 결심'과 '전쟁 결심'

1. 대남 대적 관계: "북한독립선언" "통일 포기 선언"

■ "북남관계가 더 이상 동족관계, 동질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 전쟁 중인 완전한 두 교전국 관계라는 현실"(14기 10차 최고인민회의)
■ "오늘 최고인민회의에서는 근 80년간의 북남관계사에 종지부를 찍고 조선반도에서 병존하는 두 개 국가를 인정한 기초 우(위)에서 우리 공화국의 대남정책을 새롭게 법화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14기 10차 최고인민회의)
■ 조평통, 민족경제협력국(구 민경협), 금강산국제관광국 폐지
■ 북남경제협력법(2005년),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2011년) 폐기

2. 전쟁 결심

■ "만일의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핵 위기 사태에 신속히 대응하고 유사시 핵무력을 포함한 모든 물리적 수단과 력량을 동원하여 **남조선 전 령토를 평정하기 위한 대사변 준비에 계속 박차**를 가해나가야 하겠습니다."(8기 9차 전원회의)
■ "한국 괴뢰 족속들을 우리의 전정에 가장 위해로운 제1의 적대 국가, 불변의 주적으로 규정하고 유사시 **그것들의 영토를 점령, 평정하는 것을 국시로 결정한** 것은 우리 국가의 영원한 안전과 장래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천만 지당한 조치"(건군절 연설, 2024.2)
■ 전쟁 발발 시 한국에 대한 '평정'은 흡수 통일 추구를 명백히 표출한 것

■ 북한 노선 변화의 배경 및 의미

□ 북한 공세론

◎ 국제정세의 변화인 미국의 상대적 쇠퇴, 신냉전의 도래와 이를 활용한 중러의 밀착으로 북

한이 공격적 외교 전략을 펼칠 공간 확보

◎ ‘북한 핵 그림자론’(강대국 콤플렉스): ‘핵무력’을 기반으로 한반도 주도권과 통제 가능

◎ 2023년 북한경제가 일정 수준 회복되어 한미의 도움 없이도 ‘자력갱생’이 가능하다는 자신감 확보

◎ ‘북한 신세대론’: 민족개념과 통일에 대한 열망이 크지 않는 새로운 세대인 장마당 세대의 등장

◎ 김정은 통치권이 강화되어 김일성-김정일 시기와 차별화되는 독자 노선(권위와 권력의 과시) 표출

◎ 김정은이 추구하는 사회주의 보통국가화, 우리 국가제일주의의 발로

◎ ‘남한 정부 무용론’: 지난 정권 시기, 북한의 파격적인 양보에도 한·미 정부와 실질적인 성과 미도출, 특히 남한이 미국에 종속된 관계가 확인되어 통일정책을 포함한 남한 내 근본적인 정치적 변화가 없다면 남북 관계 변화는 요원하다는 판단

□ 북한 수세론

1. 남북의 국력 차를 인정한 방어적 성격

◎ 북한의 통일방안인 고려연방제는 1민족 1국가, 2체제가 공존하는 상황에서 남한의 친북, 친 노동당 세력과 연합한 남한 흡수가 목표

◎ 이번 대남노선 전환은 체제 경쟁에서 실패를 인정한 수세적 성격

■ 체제 유지와 체제 경쟁에 대한 자신감 상실과 두려움의 결과

◎ 한국 내 북한 동조 세력 부재 및 한국민의 대북 인식 악화

■ 통일전선전술 차원에서 강조했던 ‘평화통일’‘민족자주’등의 구호도 한국민의 북한 비호감도가 80%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더는 통용되지 않음을 반영(“주요 5개국 호감도,”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 고려연방제가 실현된다면 오히려 체제 위기에 직면 가능

■ 남북 간 교류로 이른바 ‘괴뢰문화’가 합법적으로 유입되어 ‘부르주아 사상’이 만연하면 북한 체제 근간 훼손, 한국에 의한 흡수 통일 가능성 증대

◎ 불리하고 현실성 없는 민족개념 통일방안을 포기하고 두 개 국가론으로 대치

■ 민족 내부 관계의 위험성을 회피하고 주권국가로서 국제법 보호 추진

2. 남북 관계 및 한반도 주도권 회복

◎ 북한은 한국 정부의 강력한 대응, 한미(일) 협력 강화 등으로 한반도 주도권을 상실하자 대남노선 전환 공식화를 통해 주도권 회복을 시도

◎ 한미일 협력으로 주도권을 상실한 북한의 반응

■ "미국당국자들이 때 없이 뱉어내는 우리의 《정권종말》 망발과 함께 공화국주변 지역에 상시 주둔하다싶이 하는 방대한 핵전략 자산, 추종 세력을 규합하여 력대 최대규모로 쉬임 없이 벌리는 전쟁연습, 미국의 사촉 속에 강화되는 일본, 대한민국의 군사적 결탁 등은 우리 국가의 안전을 각일각 더욱 엄중하게 해치고 있습니다."(김정은 8기 9차 전원회의, 2023/12/31)

■ "핵동력잠수함을 조선반도에 출현시키는 것으로써 이해가 저물어가는 마감까지 도발을 걸어왔습니다."(김정은, 8기 9차 전원회의, 2023/12/31)

■ 억제력 조치의 효과성을 판단하는 유효한 방법이 대상의 반응임을 감안할 때 김정은의 연말 전원회의와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장황하게 한미일 협력을 비판하는 것은 주도권 상실과 대북 억제력이 작동함을 방증

◎ 한국 정부의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를 북한은 주도권 상실로 인지

■ 한국 정부가 1조 3항 일부 효력 정지를 선포한 직후 북한은 국방성 성명으로 사실상 무효화를 선언하고, 모든 군사적 조치를 "즉각"회복할 것으로 천명하였으나, 실제 도발은 제한(조선중앙통신, 2023/11/23)

■ 특히, 공헌과는 달리 서해 북방한계선의 도발은 1월 들어 완충지역으로 해안포 사격 실시, 김정은의 8기 9차 전원회의에서 9.19 군사합의 "파기"선언과 "대한민국이 우리의 영토, 영공, 영해를 0.001㎜라도 침범한다면 그것은 곧 전쟁 도발로 간주될 것"이라는 1월 최고인민회의 연설 이후에 시도

■ 북한의 제한된 도발은 2010년 이래 한미가 강화해 온 '국지도발 대응'으로 북한 도발의 범위와 양태가 제한됨을 반영

■ 이러한 상황을 주도권 상실로 판단한 김정은이 대남노선의 획기적 전환 선포를 통해 돌파

3. 한반도 긴장 조성으로 존재감 부각

◎ 김정은의 한반도 긴장 조성을 표명한 8기 9차 전원회의와 1월 최고인민회의 발언

■ "《전쟁》이라는 말은 이미 우리에게 추상적인 개념으로가 아니라 현실적인 실체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만일의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핵위기사태에 신속히 대응하고 유사시 핵무력을 포함한 모든 물리적 수단과 력량을 동원하여 남조선 전 령토를 평정하기 위한 대사변 준비에 계속 박차를 가해 나가야 하겠습니다."(8기9차 전원회의)

■ "그 무슨 일방적인《무력통일》을 위한 선제공격수단이 아니라 철저히 우리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꼭 키워야만 하는 자위권에 속하는 정당 방위력이라는 것을 다시금 확언합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자위적인 국가방위력이 오직 자기를 방어하고 전쟁을 막기 위한 데만 국한되어 있겠는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나는 우리 핵무력의 전쟁억제라는 본령 이외의 제2의 사명에 대하여 명백히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만약 적들이 전쟁의 불꽃이라도 튕긴다면 공화국은 핵무기가 포함되는 자기 수중의 모든 군사력을 총동원하여 우리의 원쑤들을 단호히 징벌할 것입니다."(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 회의)

◎ 김정은은 의도적으로 2022년 4월 25일 발언을 소환하면서 한반도 긴장 조성을 모색

■ "우리의 핵이 전쟁 방지라는 하나의 사명에만 속박되여 있을 수는 없습니다. 어떤 세력이든 우리 국가의 근본 리익을 침탈하려 든다면 우리 핵무력은 의외의 자기의 둘째가는 사명을 결단코 결행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조선중앙통신, 2022/4/25)

■ 핵을 사용한 한국 공격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호전적 발언, 특히 핵의 제2사명은 군사적 상황 외에도 국가이익에 따라 선제 사용이 가능함을 표방[1]

◎ 2024년 지속적으로 긴장을 조성하여 핵 보유 정당성을 강화하고 내년 미국과의 담판을 준비

■ 한미 대북정책의 실패를 부각하여 한반도 주도권 선점

1 일부에서는 김정은의 발언을 선제공격이 가능한 핵사용 위협이 아닌 한미의 위협에 대응하는 자위권 차원으로 해석하면서 "먼저 전쟁하는 일은 없다는 조건절"을 제시했다고 해석한다.

4. 고강도 내부 결속을 위한 선택

◎ 경제 분야에서 성과가 제한되는 상황, 장마당 세대의 등장과 사상 이완 등의 체제 근간에 대한 도전에 직면한 김정은이 내부 결속을 강화하기 위해 '주적' 개념 고취

◎ 8기 9차 전원회의를 통해 경제 분야 목표달성을 선전했지만, 실제 김정은이 천명한 경제 목표 달성은 불가능한 상황

■ 제8차 당대회 때 경제개발 5개년이 마무리되는 2025년 말까지 북한경제 1.4배 성장을 공약

■ 성취를 위해서는 매년 4% 이상의 경제성장이 요구되지만,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2021년 -0.1%, 2022년 -0.2%로 역성장하였으므로 목표 달성은 사실상 불가능

◎ 북한내 사상 이완은 역설적으로 북한이 2020년 이후 통과시킨 3대법을 통해 확인 가능

■ 북한 당국은 반동사상문화배격법(2020.12), 청년교양보장법(2021.9), 평양문화어보호법(2023.1) 등을 제정

■ 당 규율조사부 신설(8차 당대회) 및 1차 당규율 조사 부분 일꾼 강습회 개최(2024.1.29.~31): "내부통제 수요가 더 높아지고 있다는 방증"(통일부)

■ 비사회주의·반사회주의 척결 운동 차원으로 제도화된 사상 단속을 시도하는 것 자체가 북한 내 사상 이완의 심각성을 방증, 특히 강력한 처벌 조항은 사상 이완을 막지 못함을 확증

◎ 이완된 북한 내부를 단속·결속하기 위해 위협인식을 최대한 고취한 '주적' 개념을 한국에 적용

■ 한국 내 진보·보수 정부 구분 없이 "《정권붕괴》와 《흡수통일》"을 추구한다면서 '피포위의식'을 고양

■ 북한 주민의 "정치사상 생활"과 "정신문화 생활영역" 차원에서 한국을 대상으로 대적관 강조

- "대한민국을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으로, 불변의 주적으로 확고히 간주하도록 교육교양사업을 강화해야 한다"(김정은,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 회의)
- 동족 관련 낱말 사용 금지 등을 통해 북 주민에게 대남 적대감 고취

5. '신냉전'과 '다극화' 진영 구축을 위한 포석

◎ 북한은 현 세계질서를 신냉전과 다극화 추세로 정의한 바 있으므로, 한국과 대적 관계를 선포하여 한미일 협력에 대응하는 북중러 진영 구축을 시도

◎ 김정은은 의도적으로 세계가 신냉전과 다극화로 전환되었음을 강조

- "국제관계구도가 《신랭전》체계로 명백히 전환되고 다극화의 흐름이 더욱 가속화된다." (노동신문, 2023/01/01.)
- "제국주의 반동세력에 의해 전 지구적 범위에서 《신냉전》 구도가 현실화되었다"(조선중앙통신, 2023/09/28.)

◎ 북한은 한국을 이념적 진영이 상이한 적대 국가로 정의하고, 점령 대상으로 선정

- "우리 공화국이 대한민국은 화해와 통일의 상대이며 동족이라는 현실 모순적인 기성 개념을 완전히 지워버리고 철저한 타국으로,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규제한 이상 독립적인 사회주의국가로서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행사령역을 합법적으로 정확히 규정짓기 위한 법률적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 회의)

◎ 한국을 "반제자주" 적대 대상으로 상정하고 신냉전의 반대 축에 서서 북중러와 진영을 구축하려는 의도

6. 대남 핵 공격 정당화 시도

▲ 한국을 향한 핵 사용 의지 제도화

◎ 북한은 핵 개발 목적으로 미국의 핵 위협에 대한 자위권을 내세우고, 동족을 향한 핵 공격 가능성 부인

◎ 그러나, 2022년 4월 5일 김여정의 담화를 통해 전쟁 초기 주도권 장악을 위해 한국을 향한 핵 사용을 천명

- "[핵무력의] 사명은 타방의 군사력을 일거에 제거하는 것"으로 "전쟁 초기에 주도권을 장악하고 타방의 전쟁 의지를 소각하며 장기전을 막고 자기의 군사력을 보존하기 위해서 핵전투무력이 동원되게 된다."(김여정 담화, 조선중앙통신, 2022.04.05.)

◎ 김정은이 2022년 4월 30일 적대세력 한국을 향한 선제 핵 공격 공식화

■ "적대세력들에 의해 지속되고 가증되는 핵 위협을 포괄하는 모든 위험한 시도들과 위협적 행동들을 필요하다면 선제적으로 철저히 제압 분쇄"(김정은, 조선중앙통신, 2022.04.30.)

◎ 저위력 핵무기 전방 배치를 공헌: '서울 불바다 부대'

■ "조선인민군 전선부대들의 작전 임무를 추가 확정하고 작전계획을 수정하는 사업을 토의했다."(당 중앙군사위 8기 3차 전원회의, 조선중앙통신, 2022.06.22.)

◎ 2022년 9월 핵법령을 제정하여 한국을 사용 가능 대상으로 제도화

■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핵무력 정책에 대하여"는 대상을 특정하지 않고 5대 핵사용 조건만을 명시하였지만, "비핵국가들이 다른 핵무기 보유국과 야합하여 북한을 반대하는 침략이나 공격행위에 가담한다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사용원칙을 밝힘으로써 사실상 한국이 대상임을 천명(조선중앙통신, 2022.09.09.)

◎ 2023년 김정은이 직접 남한 주요 목표를 담은 지도를 앞두고 작전계획을 논의

■ 8월 29일에는 남반부 점령을 가상한 '전군지휘훈련'실시 공개

▲ 한국을 향한 핵 사용 정당화

◎ 한국을 독립된 주체이자 타자로 정체성을 규정하여 동족관계가 아닌 적대관계 확립

◎ 같은 민족이 아닌 적대세력이자 교전국가인《대한민국》에 핵 사용 가능

■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제기한 대남 핵공격 주장을 남북 관계에 근본적 변화에 연계하여 불가역적 사실로 '만드는' 과정

◎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확장억제를 제공받는 상황에서 한미를 동일체로 간주하고 적대세력으로 규정하여 자신들의 핵 자위권을 정당화하는 논리

■ 2024년에도 북한은 한미 또는 한미일 안보협력과 관련된 모든 조치를 동 주장으로 치환하여 자신들의 핵 자위권 강화 논리로 활용할 것으로 예상

◎ "핵무력"의 실제성을 강화하여 한반도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고, 한미일의 대북 핵 억제력을 무력화하여 최종적으로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고자 시도

◎ 주권 국가의 정당방위적 권리로 핵미사일 개발의 명분 확보

■ 2024년도 북한의 대남전략 전망

◎ 적대관계를 선포한 대남노선 변경에 따라 적대적인 공세 예상

◎ 9.19 남북군사합의 무력화를 지속하여 남남갈등을 확대

- 8기 9차 전원회의에서 "9.19 북남 군사 분야 합의의 파기"를 공식화한 북한은 한국 정부가 1조 3항의 효력 정지를 선조치했음을 명분 삼아 대남공세 강화
- 파기의 책임을 한국에 물으면서 공세의 수위를 높여 서해 북방한계선(NLL) 이남 한국 영해로 해안포 사격을 감행하는 수준으로 긴장 조성
- 이를 통해 '평화 대(對) 대결' 구도를 만들어 남남갈등 유발

◎ 북한판 '한국 고립화' 전략 시도

통미봉남의 기치와 한미일 협력에서 한국을 고립시키기 위한 노력 예상

한국을 주 대상으로 비난을 강화하고 한반도 긴장을 최대한 조성하되, 2025년 미국과 핵

- 담판을 위한 기반 조성
- 향후 한반도 논의에서 한국을 배제하려는 명분 구축, 남북 간 군축 논의에서 벗어나 동등한 핵보유국으로서 미국과 핵 군축 추구

■ 2024년도 북한의 대미전략 전망

◎ 2023년과 유사하게 '선택과 집중'을 시도

- 미 본토 타격 능력(정찰위성과 화성-18형) 발전 지속
- 한국, 일본, 괌을 사거리로 하는 전술핵 미사일(고체 기반) 개발

◎ 대미 군사적 시도

- '보복 확실성 태세'가 제한되므로 인도·태평양을 공간으로 전술핵을 사용한 핵 선제타격 능력을 내세워 '비대칭 위기 격상 상태'(asymmetric escalations posture)를 추구하는 전략
- 북한은 미 본토를 목표로 상호확증파괴를 통한 '공포의 균형'이 아닌 한반도, 일본, 괌 등을 대상으로 핵 타격 능력을 확보함으로써 '비대칭 위기 격상'을 통한 균형 시도
- 북한이 미 본토를 완전히 파괴할 수는 없지만, 한국과 일본, 미국령인 괌 등에 대한 핵

타격 능력을 확보함으로써 핵 능력 의미 부과

◎ 2024년 대미 '정면 돌파전'을 지속하고 2025년 미국과 '핵담판'에 나설 것으로 전망

■ 2019년 12월 북한은 7기 5차 전원회의를 통해 "핵무력 고도화"를 위한 "장기전"을 표방하는 정면 돌파전을 선포한 이래 현재까지 유지

■ 목표한 핵 능력 달성까지 대남·대미 대화 거부

■ 2024년 최대치로 핵 능력을 발전시킨 후 2025년 상반기 미국 정부와 제재 해재로 일부 핵을 동결하여 사실상(de facto) 핵보유국으로 인정받는 '핵군축' 담판 시도를 예상

■ 현재 미국 내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공식 입장과는 달리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불가능하다는 전제하에 (1)북한 핵 보유를 사실상 용인하고 핵 군축 시도, (2)억제를 기반으로 북한 체제 전환을 모색하는 두 주장이 부각하는 상황

■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의 비현실성을 최대한 부각하여 핵보유국으로 인정을 추구

■ 이 과정에서 (1) 11월 미 대선에 영향(바이든 행정부 대북정책 실패 부각), (2) 2025년 대화 국면으로 전환을 위한 명분 확보, (3) 저위력 핵탄두 안정성 확보 (4) 미국 주도의 국제 핵 비확산 규범 파괴 등을 이유로 7차 핵실험 가능성 배제 불가

◎ 일반 예상과는 달리 트럼프가 재집권하더라도 2018~19년과 같이 정상회담을 통한 북핵 문제 해결보다는 '현상 유지' 선택 가능성 상존

대외관계에 백악관 중심성, 거래적 시각, 국내정치적 이해를 앞세우는 트럼프는 실제 성과

■ 도출이 비교적 용이 한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중동지역 문제 해결 우선 가능

■ 북핵 문제는 협상이 난해하고 성과 도출이 제한되므로 북한의 극적 양보 없이는 제재를 유지하는 현상 유지를 선택할 것으로 전망

■ 북한 대남노선 전환의 한계

□ 북한의 핵 능력 제한, 한미(일)의 확장억제 작동

◎ 핵을 활용한 대남 및 대미 강압 외교, 남북관계 주도권 회복과 존재감 부각 등은 한미 및 한미일 안보협력으로 제한

◎ 한미의 확장억제 작동(핵협의 그룹, NCG)

- ■ 한미는 핵 기획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미 핵 운용 과정에 한국의 입장을 반영하는 '협의'를 강화
- ■ 재래식 연합작전계획에 북핵 공격에 대비하는 확장억제 대응계획을 발전시키는 '공동기획'추진
- ■ 이를 바탕으로 2024년 상반기 증강된 한미 확장억제 체제를 완성하고, 8월 '을지 자유의 방패' 한미연합훈련 때 북한의 핵무기 사용을 상정한 핵 작전 시나리오 훈련 계획
- ■ 한미는 2023년 10월 북한의 핵 사용 상황을 구체적으로 상정하여 미국의 확장억제 정책을 한반도에 최적화한 '한미 맞춤형 억제전략' (Tailored Deterrence Strategy, TDS)을 10년 만에 개정
- ■ 북한 핵위협에 대한 고도의 대응으로 '핵재래식통합작전'(Conventional & Nuclear Integration: CNI) 발전

◎ 북한의 공세가 오히려 억제력을 강화하는 역작용으로 귀착

◎ 북한 도발 시 최대치의 억제가 작동하여 북한의 전쟁 주도권 장악 가능성 전무

- ■ 김정은 자신도 한미가 천명하는 "북핵 도발 시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심각하게 인지, 8기 9차 전원회의와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 회의에서 각각 "정권종말까지 공개적으로 운운""정권종말 망발"로 언급

□ 북한 국지도발의 한계

◎ 한미는 2010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을 경험한 이래 '국지도발 공동 대비계획'을 마련하여 10년 이상 대비태세 강화

◎ 북한의 회색지대 도발에 대해서도 다양한 시나리오에 따라 맞춤형 훈련과 대응 태세를 마련

- ■ 북한의 가능한 도발 유형별 군사대비 태세에 대한 보고 청취(윤석열 대통령, 전군주요 지휘관 회의, 2024.1.31.)

◎ 재래식 전력이 절대 열세인 북한이 한미연합을 상대로 원점이 노출되는 국지도발을 감행할 경우 목표 달성 가능성이 제한

◎ 실제 행동보다는 '말폭탄'을 통한 위협 지속

■ 김정은이 1월 최고인민회의에서 경고한 "대한민국이 우리의 영토, 영공, 영해를0.001㎜라도 침범한다면 그것은 곧 전쟁 도발로 간주될 것"이라는 발언을 액면 그대로 해석할 경우 한국에 대한 선전포고

■ 그러나, 북한은 이전에도 유사한 발언을 아래와 같이 반복한 바 있으므로 레토릭 차원으로 해석 가능

– "우리 혁명무력은 우리 조국의 령해를 0.001mm라도 침범한다면 주저하지 않고 무자비한 군사적 대응 타격을 계속 가하게 될 것"(이명박 정부 시절, 조선중앙통신, 2010.11.23)

– "침략자들이 신성한 우리 조국의 존엄과 자주권을 0.001㎜도 침해하거나 희롱하려 들지 못하게 하여야 하겠다."(김정은, 70주년 기념 열병식 연설, 조선중앙티비, 2018/02/08)

□ 신냉전과 진영주의 한계

◎ 신냉전 미도래: 냉전(cold war)과 냉전(the Cold War) 분리

■ 전자는 일반적인 강대국과 경쟁과 갈등을 의미하므로 무력 충돌이 일어나는 열전으로 발전 가능

■ 후자는 1947~1990년간 지속된 형태로 이데올로기 경쟁, 군비증강, 절연된 진영 구축

■ 미북 간에 각각 진영 내에서 경제적 필요가 모두 충족되는 탈동조화(decoupling)는 불가능

◎ 북중러 협력은 '편의에 의한 결합'

■ 반미와 1인 지배 권위주의 체제라는 특성만 공유, 이데올로기적 정합성과 상호 신뢰 부재

■ 특히, 북러 관계는 우크라이나 특수로 인한 한시적 협력, 중국과도 차별화되는 관계

■ 북중 관계 불편함 노출: "조·로(북·러) 관계를 우리 대외정책에서 제1순으로 제일 최중대시하겠다."(김정은, 2023.9)

□ 체제 정통성 부인

◎ 선대가 채택하여 북한 정권 존재 이유와 정통성 기반인 대남 및 통일노선을 김정은이 일방

적으로 폐기: ‘통일 포기’ 혹은 ‘북한독립선언’

◎ 김일성 시기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의 2대 역사적 사명으로 규정되어 현재까지 유지된 ‘사회주의 건설과 조국통일’과 결별

◎ ‘남조선혁명론’과 ‘자주평화통일론’의 동시 폐기 선언

- 남조선혁명론: 남한 내 민족해방 ‘혁명’을 통해 북한 사회주의체제 중심의 통일 추구
- 자주평화통일론: 조국평화통일 3대원칙(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인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에 따른 민족 통일론
- “식민지 남조선 해방과 조선반도 통일”은 노동당 규약의 기초, 북한 정권의 정체성
- 빨치산 이래 북한 정권이 내세운 백두혈통, 혁명위업, 혁명전통은 모두 대남적화통일을 근간

◎ 북한의 경제난, 고난의 행군 시기 극심한 어려움 등을 모두 분단체제를 원인으로 통일을 위한 고난 감수로 치환하여 교육

◎ 한반도 특수성을 포기하고 국가관계로 전환할 경우 레토릭(rhetoric) 차원에서도 북한에 불리한 상황 상존

- 미수복한 남조선을 회복한다는 ‘통일전쟁’근거 상실, 주권 국가인 한국을 상대로 한 군사 선제공격은 내전이 아닌 침략전쟁
- 주한미군 주둔 비판에 대한 근거도 상실, 외국군 주둔은 독립 주권 국가의 선택
- 유사시 미군 참전도 내정간섭 논리로 비판 불가능

◎ 대남관계의 근본적 전환을 통해 남북을 각각 독립된 정치체로 규정한다면, 북한은 자유민주주의《대한민국》을 상대로 체제의 우월성을 증명해야 할 필요성이 오히려 확대

- 군사력 강화 외에도 경제적 성과 도출을 통한 ‘사회주의 북한’의 우월성 표출이 필요하지만, 김정은이 8차 당대회에서 공헌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따른 북한경제 1.4배 성장은 불가능

◎ 통일의 희망을 대체할 새로운 비전의 결핍

- 북한 체제에서 강조하는 ‘혁명’은 통일, 평화, 민족을 근본으로 하므로 이를 제거할 경우 1인 지배체제만 부각
- 사회주의 정상 국가와도 괴리된 수령-당-국가체제에서 분단으로 인한 통일이라는 특수 상황을 거부할 경우 주민을 설득할 대체재 부재

◎ 적대관계로 선포된 대남관계는 전쟁 준비 상시화와 강화를 동반, 북한경제에 더 부정적 영향 불가피

■ 경제와 군사력의 '병진'이 아닌 명백한 '선군'정치의 부활

■ 내부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안정적 안보 환경을 유지해야 하나 오히려 교전국 관계 선포로 과도한 안보 위기 조성

□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한 레토릭[2]

◎ 북한은 역사적으로 '반제자주'를 교조적 교리로 내세웠지만, 필요에 따른 실리외교를 지속

◎ 이번 대남 노선 전환이 제도화가 이루어지더라도, 필요에 따라 향후 남북관계 개선 여지 상존

■ 우크라이나 '특수' 중단으로 북러 협력 약화, 미중 간 관리된 관계 유지로 중국의 대북 중요성 감소, 북한의 경제발전 한계 등 다양한 상황에 따라 남북 관계 복원 가능성 존재

■ 한국의 대응

□ 두 국가론 수용 불가

◎ 1972년 남북공동성명과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등 '남북이 합의한 기본 가치'를 전면 부정

1. 통일에 관한 관심 저하 및 담론 축소

■ '통일이 매우 필요하다.' 또는 '통일이 약간 필요하다'라고 응답한 20대는 2018년 48%, 2019년 41.7%, 2020년 35.3%, 2021년 27.8%, 2022년 27.4% 등 급감(서울대 2022 통일의식 조사)

2 연계된 논쟁은 북한 '결심'의 지속력 여부이다. 남북 관계 개선이 근본적으로 난망하다는 주장과 북한이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관계를 재개할 수 있다는 주장으로 나뉜다.

2. 탈북민 보호 정당성 훼손

■ 북한 주민의 법적 국적 판단 논란 야기
■ 대한민국 헌법 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두 국가론을 부정, 이를 통해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보호하는 자국민 보호 의미를 명시
■ 두 국가론을 공식화한다면 헌법 개정을 통해 영토조항 삭제,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보호 의무 상실
■ 국내 입국 북한 주민은 새로운 법을 만들어 수용, 그러나 중국에 있는 탈북민 보호 근거 훼손

3. 북한 급변사태 한국 개입 권리 논란

■ 헌법 3조가 삭제되면 통일 기회가 오더라도 한국의 북한 개입 제한
■ 남북이 두 국가 상태에서 북한에 인도주의적 재앙이 발생한다면 한국은 다른 유엔국가와 마찬가지로 '보호책임(Responsibility to Protect, R2P) 이란?' 수준으로만 국제법상 기능 가능

4. 주변국의 반통일 및 분단 선호 확증

■ 중국의 경우 39도선 이북으로 한국 또는 한미동맹의 진입을 적대적 행위로 간주 중
■ 두 국가로 분리되면 중국은 한국의 북한 진입을 주권 국가에 대한 침략행위로 선전하며, '조중 우호협력 및 상호조약'에 따른 개입을 정당화

5. 국가로서 북한의 적대성만 부각

■ 민족과 동포, 한 핏줄 개념을 제거하면 북한은 평화와 공존의 대상이 아닌 한국을 끝없이 위협하고 '령토 완정'의 무력 점령만을 추구하는 적대국으로 고착화

□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유지 및 강화

◎ 북한의 "일방적, 반통일적, 반민족적, 반평화적" 결정에 대해 한국은 남북기본합의서에 입각한 통일을 지향하는 잠정적 특수관계를 명확히 천명

◎ 헌법 4조에 기초한 평화통일 담론을 선도

■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헌법 4조)

【토론문】

금철영 (KBS 기자)

□ 북한 노선 변화와 관련한 고찰

북한의 정치·경제·사회·군사 현황 및 대외관계와 국제정세까지 포괄한 종합적이고 입체적 분석

- 전략적·군사적 의도 이외에도 현 시점을 중대 변곡점으로 보는 이유, 특히 북한이 세계 질서를 '신냉전'과 '다극화'추세로 규정했음을 상기하고 향후 방향성까지 정밀 분석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큼.
- 북한의 대남노선 변경에 따라 2024년 한국에 대한 고강도'적대적 공세'를 예상해 볼 수 있는 근거를 자세히 명시.
- 미국 대선 국면 주시하면서 '한국을 주 비난 대상'으로 한반도 긴장을 조성하고, 2025년을 목표시한으로 미국과의 핵 군축 담판을 의도할 것으로 예측함에 따라 북한의 움직임에 대비한 다각적인 대응 계획이 필요함을 시사.

□ 군사·전략적 측면에서의 '북한 공세론' 고찰

지난해와 비교해 2024년 북한이 더욱 공세적으로 나올 가능성에 대한 설득력 있는 근거 제시 (2023년 북한이 성과라고 생각할 만한 것들)

- 러시아와의 군사동맹 수준의 관계 회복 · 군사 분야 협력 확대
- 고체 연료 기반 ICBM급 미사일 시험개발
- 정찰 위성 발사 성과
- 핵무기 탑재가 가능할 수도 있는 잠수함 진수 등 일련의 군사 부문 성과를 바탕으로 북한은 '대남 핵 위협'까지 대남 위협을 가속화.

□ 김정은 발언·북한의 대남기구 해체 의미

■ 김정은은 7·4 남북공동성명에 담긴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이라는 '조국 통일 3대 원칙'도 헌법에서 삭제해야 한다고 발언 -----〉 이는 조만간 북한이 '헤어질 결심'을 법제화할 것임을 예고

■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민족경제협력국, 금강산국제관광국과 민족화해협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북측본부 등 모든 대남 협의기구를 전면 해체 --------〉 남북관계를 교전상태에 있는 2개의 적대적 국가 관계로 규정한 것에 따른 것.
2020년 개성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때와 비교할 때 정교한 장기 계획에 따른 조치로 보임

■ 8기 9차 전원회의에서의 '유사시 핵무력을 포함한 모든 물리적 수단과 력량을 동원해 남조선 전 영토 평정'을 언급한 김정은 발언 --------〉 '동족을 향해 핵을 쓸 일이 없으며 핵은 자위용'이라고 주장해 왔던 과거 명분마저 완전히 벗어버림

■ 최근 3개월간 집중적으로 나온 김정은의 대남 위협 발언과 실제 단행된 조치 등으로 미뤄볼 때 북한의 도발 시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형태'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임

□ 위기관리와 대비 태세의 종합 점검

■ 대화를 통한 남북 관계가 완전히 단절됐다고 속단해선 안 되며, 향후 급격한 정세 변화 속에 대반전의 계기를 모색해 볼 수도 있지만, 현재로선 냉정하게 상황을 인식할 필요가 있으며 한반도에서 벌어질 수 있는 '최악의 상황'도 상정해 대비 필요.

■ 북한의 대남기구 전면 해체와 김정은의 강경 발언 등으로 대북 접촉 창구가 사라지고 장기간 복원될 가능성이 없어졌으나, 유사시 북한의 의중을 정확하게 타진할 수 있는 '대안적 핫라인 모색' 등은 강구 필요.

■ 중국은 북한과 러시아와의 '삼각공조'에 현재로선 부정적. 따라서 당장은 러시아의 정확한 의도 파악과 유사시 한반도 위기가 확산하지 않도록 분명한 메시지 전달과 관련 창구의 점검 및 강화를 검토해 볼 필요 있음.

■ 북한이 오판하지 않도록 군사대비태세를 점검·강화하고,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국민들

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점검하고 강화. -----〉 확장억제를 기초로 하는 강력한 한·미의 대응 태세는 물론, 전 국가적으로 북한의 도발에 대비하고 있다는 단호한 의지와 실행력을 보이고 입증하는 것이 중요.

-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 성과로 비대칭 군사력에서 힘의 균형이 깨졌다고 보면서 한국을 대화상대로 인정치 않고 미국과의 '핵 군축 협상'만을 외치고 있는 상황에선 남북간의 직접 협상은 불가능함. 따라서 미국은 물론 대북 영향력이 있는 중국, 그리고 최근 대북관계 개선 움직임을 보이는 일본과도 관련 사안에 대해 긴밀히 공조 필요.
- 미국 대선 이후 한반도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정세가 변화할 가능성 등을 대비해 '한·미 확장억제의 강화'뿐 아니라 유사시 독자적 대응이 가능할 수 있는 잠재력을 키우는 노력도 중요.

2024년 KWO 나지포럼 제1회 학술회의
글로벌 전쟁 상황 평가와 안보정세 전망

총 괄	김낙진(학예부장)
기 획	김유석(학예연구팀장)
진 행	김홍희(학예연구사)
편집·교정	김수빈(학예연구사)
발 행	전쟁기념사업회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29
제 작	도서출판 온샘

* 이 자료집에 실린 글과 사진의 저작권은 전쟁기념사업회에 있고, 본 기관의 동의 없이 이를 무단으로 전재하거나 복제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전쟁기념사업회

KWO Korea War-memorial Organization